

2010. 9. 10.(금) 10:00
시의회 본회의장

제 164회 부천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답변서



부 천 시

시정질문 답변순서

<input type="checkbox"/> 감 사 실	_____	9
<input type="checkbox"/> 총 무 국	_____	15
<input type="checkbox"/> 재 정 경 제 국	_____	27
<input type="checkbox"/> 복 지 문 화 국	_____	45
<input type="checkbox"/> 도 시 환 경 국	_____	73
<input type="checkbox"/> 건 설 교 통 국	_____	83
<input type="checkbox"/> 맑은물청소사업소	_____	107
<input type="checkbox"/> 뉴타운개발사업단	_____	111

차 례

【감 사 실】

- 안효식 · 원정은 · 경명순 · 장완희 의원 _____ 11
◦ 옴부즈만과 100인 소통위원회에 대하여?

【총 무 국】

- 안효식 · 원정은 · 경명순 · 서강진 의원 _____ 17
◦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 안효식 의원 _____ 19
◦ 시청앞 차 없는 거리에 대하여?
◦ 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과 관련하여?

- 안효식 · 경명순 · 서강진 · 장완희 의원 _____ 21
◦ 구청폐지 광역동과 관련하여?

- 김은화 의원 _____ 23
◦ 인사청문회 제도 및 주민검증 절차 도입에 대하여?

- 김문호 의원 _____ 24
◦ 행정개편 후 국장 책임제를 시행할 용의는?

- 김현중 의원 _____ 25
◦ 상2동 주변 보호관찰소 건립 및 한국방통대 부천지역 학습관 건립에 대하여?

【재정경제국】

- 강동구 의원 _____ 29
◦ 부천세도사건 관련 환수금액 및 실적에 관하여?
- 안효식·장완희 의원 _____ 32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 안효식·서강진·장완희 의원 _____ 34
◦ 정책간담회 참석에 대하여?
- 안효식·원정은·서강진·장완희 의원 _____ 35
◦ 시정운영공동위원회에 대하여?
- 김인숙 의원 _____ 37
◦ 로봇파크 전시관 관련 충분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방안은?
- 당현증 의원 _____ 38
◦ 중·상동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시설 및 공중화장실 건립 계획은?
◦ 중소기업 살리기 일자리 창출관련 세일즈시티 추진 계획은?
- 김은화 의원 _____ 40
◦ 부천시 산하기관 인사문제와 관련하여?
- 서강진 의원 _____ 42
◦ 주민센터 공과금 자동수납기 설치와 관련하여?
- 김혜경 의원 _____ 43
◦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필요성과 관련하여?

【복지문화국】

- 한기천 의원 _____ 47
 - 기초생활 수급자 및 저소득층 중식제공과 관련하여?

- 안효식 · 서강진 · 장완희 · 김한태 · 박노설 의원 _____ 48
 - 광역화장장 조성과 부평화장장 빅딜관련 대책 등은?

- 안효식 · 당현증 · 장완희 의원 _____ 50
 - 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 임명동의안과 관련하여?

- 안효식 의원 _____ 52
 - 진말몽당축제와 관련하여?

- 당현증 의원 _____ 53
 - 부천영화제에 관하여?

- 원정은 의원 _____ 55
 - 무형문화엑스포 축소·폐지에 관하여?

- 윤병국 · 경명순 의원 _____ 57
 - 문예회관 건립 방안에 관하여?

- 윤병국 의원 _____ 59
 - 부천문화재단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 사회복지관에 대한 민간위탁 개선 방안은?

- 한혜경 의원 _____ 62
 - 성별 영향평가 사업 및 성인지 예산제도 등에 대하여?

- 김문호 의원 _____ 67
 - 중앙시장부터 부천대 주변까지를 청소년들에게 볼거리 및 공연장, 쉼터 등 문화의 거리 조성 할 용의는?

- 김한태 의원 _____ 69
 - 부천시내 박물관 운영에 관하여?

- 박노설 의원 _____ 70
 - 삼정동 소각장 폐쇄이후 부지 및 건물 활용방안, 신흥동 주민센터 신축에 대하여?

- 김현중 의원 _____ 71
 - 영상문화단지 및 서커스 상설 공연장과 관련하여?

【도시환경국】

- 당현증 의원 _____ 75
 - 반달마을 반달공원의 우범화에 대한 대책은?

- 경명순 의원 _____ 76
 - 중2동 워브더스테이트 제5, 7호 주차장 공원화와 관련하여?

- 강병일 의원 _____ 77
 - MBT 시설 준공시기 지연 및 MBT시설 결함보완 대책은?

- 김현중 의원 _____ 79
 - 상동호수공원 개선방안은?
 - 시민의 강 개선방안은?
 - 굴포천 물길연결사업 추진의향은?
 - 상동 길병원 건립대책은?

【건설교통국】

- 강동구 의원 _____ 85
 - 시내버스 차고지와 시내버스 양도양수 및 버스노선 신설변경과 관련하여?
- 안효식 의원 _____ 88
 - 버스공영차고지에 대하여?
- 김인숙 의원 _____ 89
 - 교통정보 수집 제공장치 관련 및 차량단말기 기기 선정과정은?
- 안효식·김한태 의원 _____ 90
 - 춘의사거리 고가차도 설치와 관련하여?
- 윤병국 의원 _____ 91
 - 장애인 콜택시와 관련하여?
- 경명순 의원 _____ 92
 - 송내 북부역 주변 교통체계 개선대책은?
- 윤 근 의원 _____ 93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활용방안은?
 - 돌리거리 불법광고물 전단지 단속방안은?
 - 전철역부근 불법노점상 관련 근절대책은?
- 김문호 의원 _____ 98
 - 원미역을 신설할 용의는?
 - 소풍관련 이행보증금과 지하보행로 관련 시장의 의지는?
 - CCTV와 관련하여?
- 김현중 의원 _____ 104
 - 상동신도시 호수공원과 영상문화단지 및 상2, 3동 아파트 주변의 통행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지하화 방안에 대하여?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장수~계양간 지정체 완화 실행방안은?

【맑은물청소사업소】

- 강병일 의원 _____ 109
◦ MBT 준공지연에 따른 RDF 공급협약 미이행 및 쓰레기 대란 우려에 대한 대책은?

【뉴타운개발사업단】

- 안효식 의원 _____ 113
◦ 심곡복개천 복원과 뉴타운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은?
- 김문호 의원 _____ 114
◦ 뉴타운개발과 관련하여?

감 사 실

□ 질문의원 : 안효식 · 원정은 · 경명순 · 장완희 의원

- 소통위원회를 읍부즈만이 운영하는 것은 정치적 도구화 장치 아닌지 ?
법적근거와 타당한 이유는 ?
- 읍부즈만이 시민소통위원회에 참여하게 된다면 정치적 중립 · 행정적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대책은 ?
- 시민소통위원회의 법적근거와 설립목적은 ?
- 읍부즈만은 정당관련 직위를 겸직할 수 없는데 시장의 생각은 ?
- 읍부즈만이 선거운동기간 중 캠프에서 함께 일했는데 행정감시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는지 ?
- 100인 소통위원회로 인해 소요되는 예산은 ?

(답 변)

-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32조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수행 업무는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등 시민읍부즈만의 역할을 시민읍부즈만 1인이 아닌 위원회 차원으로 더 확대한 것으로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운영하고 있음.

- 우리시에서는 1997년도에 의원발의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동 제도를 운영하여 오던 중 민선 5기 새로운 시정 출범을 계기로 시민의 고충민원 해결 및 권익보호 등의 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문제사안 발생시 고충민원 해결은 물론 이해관계인간의 갈등 해소와 함께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시민사회 조성을 위해 시민소통위원회의 설치를 모색하게 되었음.
- 따라서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보다 더 적극적으로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함은 물론 더 나아가 이해관계인간의 갈등해소 및 적극적인 시민 의견수렴과 소통화합을 위하여 필요시 각 사안별로 시민소통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부천시 시민옴부즈만운영에 관한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임.
- 이러한 취지에서 시민옴부즈만이 시민소통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정치적인 목적이 없으며 정치적 중립성과 행정적 독립성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특히, 시장과 선거운동을 같이한 것은 사실이나 2010. 7. 26.일 당적을 완전히 정리하였고, 시민옴부즈만으로서의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민옴부즈만으로 위촉된 만큼 시민옴부즈만 본연의 임무를 다 할 수 있을 것임.
- 시민소통위원회는 사안 발생시 각 분야별로 구성·운영토록 되어 있어 현재로서는 시민소통위원회 운영으로 인한 소요예산 추정이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람.
- 앞으로 시민소통위원회가 설치 목적대로 훌륭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음.

※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시민소통위원회 비교

구 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시민소통위원회
목 적	시민 고충처리, 권익보호	시민 고충처리, 권익보호 갈등해소 및 시민소통·화합
설치근거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 설치에관한법률	없음
구 성 원	전문가	이해관계인, 전문가
상설 여부	상설 (1회)	비 상설 (수시)
구성 형태	단일 위원회로 구성	해당 사안별로 별도 구성

총 무 국

□ 질문의원 : 안효식 · 원정은 · 경명순 · 서강진 의원

- 공약사항인 전면 무상급식을 안하고 단계적 무상급식 실시 이유는?
- 연도별 무상급식 실시계획과 소요예산액은?
- 무형문화엑스포 삭감예산으로 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문제점 등
- 무상급식과 친환경무상급식의 혼용 사유는?
- 과도한 재원으로 인한 재정악화 등에 대한 재원확보 대책은?

(답 변)

- 친환경 무상급식은 초·중학교 교육이 무상교육이듯 급식도 무상으로 실시하여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 학생의 건강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는데 그 목적이 있음.
- 당초 2011년부터 초등학교 5,6학년에 대한 무상급식을 시작하여 2014년까지 초·중학교 전체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현하는 것을 공약으로 제시하였으나,
 - 경기도 교육청의 무상급식추진계획 5개년 계획에 맞추어 그 시기와 대상을 조정하여 금년 2학기부터 초등학교 5, 6학년에 대한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되었음.
- 연도별 무상급식 실시계획 및 전체 소요예산액은 아래표와 같음

대상자	학생수 (명)	예산규모(천원)					급식일	급식 단가	비고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82,179	3,857,820	13,764,600	24,383,736	29,512,080	40,218,633			
초등 5,6학년	21,445	3,857,820					90	초등 학생수 변동	
초등 3-6학년	38,235		13,764,600				180		
초등 전체	52,102			18,756,720	17,760,600	17,402,760	180	2000 2013년 49,335명	
중학교3학년	10,980				4,941,000		180		
중학교 전체	30,077					13,534,650	180	2,500 2014년 48,341명	
친환경식자재				5,627,016	6,810,480	9,281,223			

※ 국비 부담분 증액 및 경기도에서 부담 시 시 예산은 줄어들 수 있음.

- 금년도 부천무형문화엑스포 삭감 예산을 재원으로 2학기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금년 부천무형문화엑스포 행사의 당초 예산액은 총 92억원으로 국비 20억원, 도비 15억원, 시비35억원, 자체부담 22억원이었으나, 행사기간 및 규모를 축소하여 국·도비 지원은 변동이 없고 시비 20억원과 자체부담액 10억원을 절감하여 총 62억으로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음.
 - 따라서 예산 절감에 따른 국·도비 반납은 없으며, 시비 절감액 20억원을 무상급식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임.
- 무상급식과 친환경무상급식의 혼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친환경무상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등에 따른 준비 기간이 필요함, 그래서 단계적인 무상급식을 우선 실시하고 2011년 중으로 『친환경무상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초등학교 전체에 대한 무상급식이 이루어지는 2012년부터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 함으로써 혼용 사용하는 것임.
- 친환경무상급식은 학교급식법과 부천시 학교급식지원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해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됨.
 - 부천시는 앞으로 국회의원 및 도의원 등을 통하여 국비 부담분의 증액은 물론 시비부담액중 일정부분을 경기도가 부담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친환경무상급식 시행에 따른 시의 재정 부담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또한 여성축구단의 해체와 무형문화엑스포 미개최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의 절감, 경상적경비의 절약, 소모적 예산의 절감 등을 통하여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 질문의원 : 안효식 의원

- 지하철공사기간이라도 차 없는 거리를 해제하여 도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고 운전자들의 고민과 답답한 마음을 해결해줄 용의가 없는지?
- 포장마차, 자전거대여점, 인라인대여점 등이 자리를 점령하고 있는데 누구를 위한 차 없는 거리인지?
- 운영시간에 현장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용의는?

(답 변)

- 시청 앞 차 없는 거리는 시민과 청소년이 가족과 함께 건강한 스포츠 활동이나 건전한 놀이 문화 공간 제공을 위해 1999년 5월부터 토요일 12:00에서 일요일 22:00까지 운영해 오고 있으며, 경기도내 19개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음.
- 차 없는 거리는 청소년 성인 놀이 공간, 문화행사 공간, 영·유아놀이 공간, 자전거 인라인 공간 등 4개 공간으로 나누어 안전사고 예방과 청소년 연합축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와 민속놀이(투호, 굴렁쇠 굴리기, 제기차기)를 개최하고 있음.
- 2009년에는 23회의 문화행사와 5만3천명의 청소년과 시민이 이 거리를 이용하였으며, 2009년 6월 시민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74.6%가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 해제는 어렵다 하겠음.
- 주변 불법노점상, 포장마차 등에 대해서는 자율정비 17건, 강제수거 4건, 과태료는 20만원(1건)을 부과하였으며, 지난 5월에는 단속과정에서 노점상연합회의 폭력으로 6명이 입원하는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음. 향후 단속원을 중점 배치하여 노점상진입과 불법주차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음.
- 시의회~이마트간 도로에 대해서는 집중단속을 실시함은 물론 시청과 중앙공원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안전요원 4명을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질문의원 : 안효식 의원

- 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과 관련하여
 - 지상층에 야외 골프연습장이나 종합 스포츠타운을 지어 운영(위탁)해서 종합운동장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을 충족시킬 용의는 없는지?
 - 종합운동장 관리에 시민의 혈세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는데 향후 대책은?

(답 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체육공원 내 야외 골프연습장의 설치는 불가하나, 스포츠센터와 같은 체육시설 설치 가능성은 종합운동장의 증축가능 건폐율 10% 중 1.08%의 여유가 있어 잔여면적(6,334㎡)에 대한 체육시설 설치 가능함.
- 그러나 부설주차장은 종합운동장의 주차수요를 근거로 확보된 주차장으로 부설주차장(1,195면)내 새로운 체육시설물(스포츠센터) 설치시 주차수요 증가에 따른 법정 주차대수 추가 확보와 기존 주차장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만큼 기존 주차장을 철거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많은 예산이 필요함.
- 향후 지하철 7호선 개통시 환승에 따른 기존 주차장 이용의 편리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부설주차장과 종합운동장 연결램프 설치로 접근성이 용이하게 하고 시설물을 최상으로 유지하여 국내·외 대규모 경기 및 행사가 유치되게 함으로서 종합운동장 운영비 부담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질문의원 : 안효식 · 경명순 · 서강진 · 장완희 의원

- 구청 폐지 광역동 채택으로 행정체제를 개편하겠다고 공약하였는데 이번 조직개편(안)을 보면 많은 업무를 구청에 이관하게 되어 있어 공약과 배치되는 것이 아닌가? 이에 대한 향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 변)

- 현재 지방행정계층구조는 시-구-동 3단계 행정계층구조로 행정계층간 업무의 중첩성, 행정지체와 낭비, 종적인 의사 전달 등 행정 효율성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정치권 및 학계에서 행정계층구조 개편 연구가 활발하며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 특히, 우리시의 경우 현재 구청간 행정 불균형이 심하여 대책이 필요하며, 전국의 일반구가 설치된 12개 대도시의 평균 행정구역 면적이 353km²이나 우리시는 53.44km²로 가장 협소하고, 경기도 1개동 평균면적은 5.49km², 전국 4.7km², 우리시는 1.44km²로 다른 도시에 비해 면적 협소와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로써 행정수요와 주민이용에 있어 광역동 행정체제 개편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됨.
- 그러나 현재 구는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의 선거구 등 기준 역할을 하고 있어 구 폐지가 우리시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며, 행정안전부 승인과 관계 법령의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임.
- 따라서 우리시 실정에 맞는 행정체제로 개편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등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방향에 맞추어 장기과제로 추진할 계획임.

- 그렇지만 온라인 민원처리 등 행정여건이 많이 변화된 상황에서 소규모 동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 우선, 인구 2만명 이하의 소규모 동을 대상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시범적으로 자율 통합을 추진하겠음.
- 소규모 동 통합에 따른 잉여청사에 대해서는 공공보육시설, 작은도서관, 청소년공부방, 문화복지센터 등 지역 주민을 위한 주민편의시설로 활용할 계획임.
- 이번 조직개편은 서민생활과 밀접한 인·허가 업무와 지도단속 사무를 구청으로 이관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있으며 민선 5기 시정목표와 맞게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음.

【50만 이상 대도시 일반구 설치 현황】

(2010.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

구분	시	인구(명)	면적(km ²)	동수(개)	일반구수	비 고
경 기 도 (7개)	수원시	1,073,144	121.01	39	4	
	성남시	962,726	141.72	47	3	
	고양시	938,784	267.41	39	3	
	부천시	869,944	53.44	37	3	
	용인시	839,204	591.35	30	3	
	안산시	705,346	149.06	25	2	
	안양시	616,547	58.46	31	2	
충북	청주시	643,161	153.45	30	2	
충남	천안시	540,832	636.21	28	2	
전북	전주시	635,007	206.11	33	2	
경북	포항시	509,475	1,128.78	29	2	
경남	창원시	1,080,441	737.00	64	5	

※ 남양주시 : 525,000명이나 일반구를 설치하지 않음

□ 질문의원 : 김은화 의원

- 고위공무원 임용 시 인사의 합리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주민검증 절차 도입’과 ‘인사청문회 제도’의 조례 제정

(답 변)

- 우리시의 고위공직자는 부시장, 구청장, 국장 등 총 13명임. 2급인 부시장은 경기도와 인사교류에 의해 임용하고 있으며, 4급인 구청장과 국장급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근무경력, 전문성, 적성 등을 고려하여 임용하고 있음.
-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검증 절차 및 인사청문회 제도”의 조례 제정은 상당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함. 하지만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법령의 범위 내에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령에서 위임되지 않은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임용권에 대한 견제나 제약에 해당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 할 수 없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람.

〈 대법원 판례(2004.07.22) 사례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등의 대표에 대한 임명권의 행사에 앞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권에 대한 견제나 제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결 함.

- 앞으로 고위공직자 승진 시에는 다면평가 등을 통해 하위직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겠으며, 또한 고위공직자 임용 시에는 임용이유, 경력, 업무실적 등 관련정보를 공개하여 인사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음.

□ 질문의원 : 김문호 의원

- 국·과장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시장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여 책임을 지는 국·과장으로 전환할 계획은 없는지 ?
- 자리만 지키기 위해 급급한 국장은 자진해서 노력하는 국장에게 양보하고 스스로 용퇴하거나 정리할 용의는 없는지 ?

(답 변)

- 우리시는 「부천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라 시장의 권한을 부시장·국장·과장에게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권한과 책임을 함께 지도육하고 있음.
- 우리시 전체사무는 3,362건이며, 이중 6%에 해당하는 중요한 정책결정 등 233건만 시장이 관장하고 있으며, 부시장이 5%인 168건, 국장이 15%인 552건, 과장과 팀장이 74%인 2,961건을 관장하여 처리하고 있음.
- 앞으로 시장과 부시장에게 주어진 권한 중 법령이나 중요한 정책결정 사항 등 최소사무를 제외하고는 국장에게 대폭 위임하여 국장이 시정 전반에 걸쳐 책임 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음.
- 국장에 대한 평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 근무성적 평정 규정에 따라 목표달성도의 평가, 부서 운영에 대한 평가 그 밖에 직무 수행과 관련된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향후 평가를 통해 능력이 없는 국장에 대해서는 인사풀체 또는 서울시 등 타 시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음.

□ 질문의원 : 김현중 의원

-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미구 상동 559-5번지에 법무부가 추진 중인 “보호관찰소 건립에 따른 주민반대”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 동 부지에 “한국방송대 부천지역 학습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한국방송통신대학측의 요구에 부천시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답 변)

- 상2동 주민센터 옆의 상동 559-5번지에 있는 1,447m² 면적의 부지는 보호관찰소 신축부지로 법무부에서 관할하고 있음.
- 보호관찰소는 꼭 필요한 시설이고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혐오시설은 아니며, 또한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막을 제도적 방법은 없음.
- 그러나 꼭 필요한 시설이라도 많은 시민이 입주해 있는 아파트와 학교 등이 많은 곳으로서 시민들이 반대하는 장소에 보호관찰소를 꼭 유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며, 이 부지에 강의실과 도서관 등을 갖춘 방송통신대학 학습관을 건립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봄.
- 방송통신대 학습관 신축지원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립대학인 방송통신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할 수 없으므로 우리시에서는 방송통신대 측에 현재 학습관이 입주해 있는 부천문화원 신축에 따른 지분참여 방법으로 학습관 확보의사를 문의한 결과 독립된 학습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분참여는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은바 있음.
- 앞으로 시에서는 주민들과 한국방송통신대학이 추진코자 하는 보호관찰소 신축반대 및 동부지 내 학습관 유치를 위하여 대체부지 조사 등의 행정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며, 학습관 확보를 위한 또 다른 방법에 대해서도 한국방송통신대학 측의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음.

재정경제국

□ 질문의원 : 강동구 의원

- '94년도 세금 횡령사건과 관련 아직까지 회수하지 못한 금액에 대한 대책은?
 - 미환수된 12억여원의 환수를 위해서 그간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 향후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감시시스템 도입 의향은?

(답 변)

- 1994년도 부천시 세금횡령 사건으로 총 2,550백만원의 횡령액이 적발되었으며, 그 중 1,327백만원을 환수하고 현재까지 1,223백만원을 환수하지 못하고 있음.
- 미 환수내역은 붙임 내역과 같음.
- 우리 시에서는 미환수금 1,223백만원을 환수하기 위한 노력으로
 - 본 채권이 2007. 11. 30. 기간 만료로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7. 9. 20.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10년간 채권유효기간을 연장 하였고
 - 채납액에 대해서는 납부에 대한 인식을 상기시키기 위하여 매분기 납부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여 납부를 독려하고 있음.
 - 채납자에 대한 재산 및 차량 소유현황을 수시로 조회하고 있으나,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어 별도로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상황임
 - 2008. 7. 28.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채납자에 대한 직장조회를 의뢰하였지만,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음을 이유로 결과를 회신받지 못하여 급여 등 채권압류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2009. 10. 14. 가족명의 재산 압류를 위한 변호사 자문결과 사해행위 취소 소송기간(5년)의 경과로, 가족명의 재산에 대한 행정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음.

- 한편,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에 대하여는 그간 법적 검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였고 현재 관계기관 및 변호사 등과 다시 한번 구체적 대안을 협의 중에 있으며, 가능할 경우 출국 금지도 적극 실행토록 하겠음.

- 지방세 부과 징수 및 과오납금 반환과 관련 이를 보다 투명하게 하고 비리 방지를 위하여, 2010년 1월부터 감사실 주관으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담당과장이 직접 감시하고 감시결과를 분기별로 감사실에 통보하고 있음.

횡령액 체납자 내역

(단위:원)

번호	성명	구분	횡령액	납부액	미납액	비고
	합계		2,550,000,000	1,327,394,170	1,222,605,830	
1	○○○	공무원	295,253,470	237,269,470	57,984,000	일부납부
2	○○○		30,332,520	11,000,520	19,332,000	일부납부
3	○○○		212,084,520	136,577,520	75,507,000	일부납부
4	○○○		503,482,010	25,986,010	477,496,000	일부납부
5	○○○	공무원	99,187,200	64,801,200	34,386,000	일부납부
6	○○○	공무원	80,225,670	0	80,225,670	
7	○○○	공무원	133,532,580	34,065,580	99,467,000	일부납부
8	○○○	공무원	42,404,960	39,735,960	2,669,000	
9	○○○	공무원	155,221,820	30,263,820	124,958,000	일부납부
10	○○○	공무원	67,551,706	49,802,706	17,749,000	일부납부
11	○○○	공무원	222,806,540	54,681,540	168,125,000	일부납부
12	○○○		34,374,640	0	34,374,640	
13	○○○		30,332,520	0	30,332,520	
	완납자 (15명)		643,209,844	643,209,844	0	

□ 질문의원 : 안효식 · 장완희 의원

○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과 관련

-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서둘러 시행하려는 이유는?
- 소요되는 예산과 구성원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시행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데 시 입장은?

(답 변)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그동안 행정기관이 독점적으로 행사해 온 예산 편성 권한을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에게 분권화하는 것으로서
 -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 15년이 지난 현재 우리 부천시민들의 자치역량이나 시민의식을 볼 때,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참여예산제도 시행이 이르다고 할 수 없을 것임.
 - 또한, 이 제도는 광주 북구청이 2004년 3월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2005년 8월에는 지방재정법에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근거가 마련되었음. 2010년 9월 현재 전국에서 약 100여개, 경기도에는 14개의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한 바, 이러한 전국적인 추세를 볼 때 우리 시는 시기적으로도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할 것임.
 - 우리 시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다소 늦게 시작하는 만큼 이번 회기에 제출된 조례안에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선진적인 내용을 담아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를 실현하고자 노력하였음.
-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따라 시행할 경우에 운영조직은 참여예산시민위원회와 참여예산조정위원회, 참여예산주민회의를 구성하고, 시민예산학교와 참여예산제연구회를 운영할 계획임.
 - 참여예산시민위원회는 지방재정 및 행정관련 전문가 26여명과 주민회의에서 추천한 위원 74명 등 약 100여명의 인원으로 구성하게 되며, 참여예산조정위원회는 시민위원회에서 추천한 위원과 시 공무원 등 15명으로 구성하게 됨.

- 또한, 동단위의 참여예산주민회의는 주민자치위원과 공개모집한 시민 등 동별 100명이내로 구성하며, 비상설 회의체로 운영하게 됨.
 - 참여예산제연구회는 전문가, 공무원 등 약 10여명으로 구성하며, 시민예산학교는 위원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재정 관련사항을 교육하고자 비상설로 운영하게 됨.
-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은 회의 수당, 운영비 등에 약 5천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음.(동 주민회의는 비상설 회의체로 수당 미지급)
- 동 주민회의에서 결정하는 소규모의 주민생활 편익사업(골목길 정비, 보안등 개·보수, 꽃길 조성, 방범 CCTV설치 등)에 소요되는 예산은 사업규모에 따라 일정액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나 매년 예산에 편성하는 소규모편익사업비를 활용하게 되므로 새로운 부담이 생기는 것은 아님.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의 주체로서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스스로 지역문제를 찾아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를 보다 더 나은 지역공동체로 만드는 데 많은 기여를 할 것임.

□ 질문의원 : 안효식 · 서강진 · 장완희 의원

- 민주당 정책토론회에 부시장을 참석하도록 한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닌지 정확한 경위를 밝히고 방지 대책과 이에 대해 사과할 용의는?

(답 변)

-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위원장 김진표) 주관으로 2010년 8월 12일 오전7시 30분 국회 귀빈식당에서 민주당 소속 경기도 기초단체장을 대상으로 정책간담회가 개최되었음.
 - 참 석 : 민주당 소속 경기도 시장 등 (11명)
경기도 출신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등
- 우리 시에서는 시장 휴가(8. 9 ~ 13)로 인해 부시장이 시장을 대신하여 간담회에 참석하였음.
- 정책간담회 주요내용으로 최근 LH공사의 경영난, 경기침체 등으로 우리 시와 관련하여 사업 포기 및 순연이 예상되는 괴안 11B구역 주택재개발 및 물류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하였음.
- 또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친환경 무상급식의 국비 지원 확대 등 9건의 2011년 국비 신청 주요사업에 대해 국비가 차질 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바 있음.
- 이날 부시장의 정책간담회 참석은 부천시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주요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를 위한 것으로 특별한 정치적 이해관계나 특정 정당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님을 널리 양해 해 주시기 바람.
- 앞으로 정당의 정책간담회 등에서의 공무원 참석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한 정당에 상관없이 부천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겠음.

□ 질문의원 : 안효식 · 원정은 · 서강진 · 장완희 의원

○ 시정운영공동위원회에 대하여?

- 시정운영공동위원회 설립의 법적·제도적 근거는 무엇인지?
- 시장이 특정 정당과 단체들과 공동으로 시정을 운영하겠다고 이 위원회를 만든 근거는 무엇인지?
- 시정운영공동위원회가 각종 위원회의 역할과 중복되고, 시의회를 약화시키고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대책은?
- 시정운영공동위원회가 시정의 혼란과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바 대책은?
- 부천시민들과 소통하고 화합하기 위한 대책은?

(답 변)

○ 시정운영공동위원회 설립의 법적·제도적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 시장은 시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시민들로부터 자문을 받고 있으며, 시정운영공동위원회도 이러한 시장의 자문기구 역할을 하고 있음. '당정협의'와 같은 높은 수준의 정치적 협의체로, 아무런 예산 지원 없이 자발적으로 운영되므로 현재로서는 관련 조례의 제정 또한 없음.

○ 시장이 특정 정당 및 단체들과 공동으로 시정을 운영하겠다고 위원회를 만든 근거에 대하여?

- 지난 6.2지방선거기간 중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시민참여형 공동지방정부 모델을 만들 것을 시민들 앞에 약속한 바 있으며, 시정운영공동위원회는 이러한 약속의 실천임.

- 중앙정부를 비롯하여 자치단체들이 다양한 ‘당정협약’을 통하여 국
정이나 시정을 조율하듯, 시정운영공동위원회도 공동의 정책을 충실
히 이행하기 위한 협의체 역할을 함.
- 시정운영공동위원회가 각종 위원회의 역할과 중복되고, 시의회를 약
화시키고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대책은?
- 시정운영공동위원회는 정책의 방향을 시장에게 제시하고 협의하는
역할을 할 뿐이어서 시의회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집행부 내에 설치
한 각종 위원회의 역할과 중복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임.
- 시정운영공동위원회가 시정의 혼란과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가
능성이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은?
- 시정운영공동위원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바
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므로 오히려 시정의 혼
란과 행정의 비효율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임.
- 부천시민들과 소통하고 화합하기 위한 대책은?
- 시정 슬로건 ‘시민이 시장입니다.’에 표현된 바와 같이, 시민이 적극
적으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강구할 것임. 시정운
영위원회도 이러한 소통의 주요한 일환이며, 주민참여예산제, 시민
소통위원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과 소통해나갈 것임.

□ 질문의원 : 김인숙 의원

○ 로봇파크 전시관 관련 충분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방안은 ?

(답 변)

- 우리시에서는 4대 특화사업 중 하나인 로봇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로봇기업들의 완제품 시험공간(테스트 베드) 제공 및 어린이 등 차세대를 위한 로봇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지난 2006년부터 부천테크노파크 401동 2개층에 국내 최초의 지능형로봇 상설 전시관인 부천로보파크를 운영하고 있음.
- 그간 연인원 27만 9천여명이 관람하였고, 생활과학교실 등 다수의 국·도비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각종 로봇경진대회 등을 개최하여 로봇에 대한 다양한 체험과 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특히 경기도가 주최하고 산업진흥재단(로보파크)이 주관하여 오는 9월 17일 개최하는 경기과학축전은 로봇을 주제로 할 계획임.
- 현재 로보파크의 전담인력은 6명으로 다소 부족한 점은 있으나, 운영기관인 산업진흥재단 내부인력 재배치, 관람객이 증가하는 학교 방학기간중 기간제 근로자 활용 등을 통해 효율적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또한, 금년도에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노후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및 기존 2개층에서 3개층으로 확장하는 공사를 진행중에 있어 공사가 완료되는 2011년 3월에는 보다 흥미있는 볼거리와 로봇교육의 장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며,
- 다만, 신기술이 접목된 로봇 및 전시 콘텐츠의 적기 보장이 필요하여 2011년 본예산에 로봇콘텐츠 구입비 5억원을 확보할 계획이고, 로봇교육 사업에 대한 국도비 확보방안도 다각도로 강구중임.

□ 질문의원 : 당현증 의원

○ 중·상동의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주차시설 및 공중화장실 건립계획은 ?

(답 변)

- 유통시장 전면개방과 유통업태의 구조변화에 따라 대규모점포 및 SSM 입점과 전자상거래 등 신업태의 등장으로 전통시장의 경쟁력이 점차 상실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전통시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2년부터 시설현대화사업과 경영혁신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여 왔으며, 특히, 아케이드 설치, 주차장 건립, 공중화장실 신설 및 개보수 등 기반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고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여 왔음.
- 전통시장에 주차장을 건립하려면 부지면적이 최소 1,300㎡ 이상이 되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시장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여야 이용효율이 높으나 시장주변의 지가가 높아 감정가액으로 적정 부지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관계로 추후 상인회와 협의하여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음.
- 또한 공중화장실은 기피시설로서 단독으로 설치하는 것 보다는 고객편의센터 건립 시 함께 설치하는 것이 부지확보의 어려움 등을 해소할 수 있으므로 상인회 의견을 수렴하여 대상 부지가 확보되면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음.
- 참고로 부천상동시장은 2004년도에 31억 2천 4백만원의 예산을 반영 주차장을 건립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부천중동시장은 2008년도에 6억 4천 9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중동 724번지 내에 고객편의센터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여 상인 및 고객들에게 전면 개방하고 있음.

□ 질문의원 : 당현증 의원

○ 세일즈시티가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답 변)

- 지금까지 중소기업지원은 주로 일회성에 그치고 있고 직접지원 보다는 간접지원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지속적 직접적으로 지원체제로 바꾸어 보고자,
- 모두 1억9천만원의 사업비로 지난 2009년 11월말 '세일즈시티 (www.salecity.or.kr)'를 오픈하고 부천산업진흥재단에서 운영해오던 산업정보포탈 '비즈부천(www.bizbc.or.kr)'과 통합구축을 2010년 6월 말 완료하였음.
- 지난 2009년 7월 우리 시와 우정사업본부, 한국생산성본부가 '세일즈시티 구축사업' 3개기관간 협약을 통하여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음.
- 현재 650여개사 1400여개의 상품이 등록되어 있고 우체국 b2b와 b2c를 통하여 아직은 초보적인 단계지만 관내 중소기업 상품구매가 언제든지 가능한 수준으로 구축 되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업체가 등록되어 판매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특히, '세일즈시티(www.salecity.or.kr)'운영에 관하여는 부천산업 진흥재단으로 이관하여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음.

□ 질문의원 : 김은화 의원

○ 부천시 산하기관 인사문제와 관련

- 지난 민선4기 시장 재임시를 비롯해서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이후 끊임없이 벌어지는 지방자체단체의 인사 전횡의 문제점들 뿐만 아니라, 부천시 산하기관(공기업)의 인사운영과 관련하여 87만 부천시민의 비판적 여론이 많음.
- 이미 언론에도 거론된 공기업의 인사 문제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
-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운영을 위한 개선책은 무엇인지 ?

(답 변)

○ 언론에 거론된 공기업의 인사문제에 대하여

- 우리 시에는 부천시설관리공단, 부천문화재단, 부천산업진흥재단,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등의 산하기관이 있음.
- 그동안 일부 산하기관의 불합리한 인사운영이나 내부 갈등에 관한 사항들이 언론에 보도 되고, 비판적 여론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함.
- 현재 산하기관의 인사조직과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기 위하여 정기 감사와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있음. 그 결과를 토대로 하여 조직의 쇄신과 경영혁신을 통하여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생산적 조직으로 재편하여 대 서민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음.

○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운영을 위한 개선책

-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운영을 위해서 우선 관련 법규나 제도를 점검하여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 향후 임직원 채용 시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채용 절차를 준수하여 형식만 갖춘 정실인사를 배척하고 실질적인 공개채용을 하는 공정한 인사관행을 정립해 나가겠음.

- 현재 산하기관에 일부 정치인 등 유력인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주변 인물이나 친인척들이 다수 근무하고 있는 것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음.
- 공정한 절차에 의한 검증된 인사가 아니어서 조직의 불만과 화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문제가 야기된다면 이들의 거취문제는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한 사회 건설’이라는 차원에서 스스로 판단해야 할 것임.
- 앞으로 산하기관의 조직을 새롭게 정비하고 비효율적인 내재요인을 다잡아 나가는 차원에서 일정기간 동안 공무원의 파견근무도 적극 검토할 계획임.
- 또한 직원채용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용 대행기관 등에 위탁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산하기관의 인사제도가 투명하게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음.

□ 질문의원 : 서강진 의원

- 각동 주민센터에 공과금 자동수납기를 설치하여 본인의 공과금 납부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고 공과금 수납기를 통하여 직접 납부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

(답 변)

- 공과금 자동수납기는 1대당 500만원의 설치비용과 1대당 월 200만원의 유지관리비가 소요되는데 설치 주체가 금융기관이므로 금융기관에서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것임.
- 정보화 발달로 그동안 시민들의 납세 편의가 많이 향상되어 창구 수납 외에도 인터넷, 가상계좌, 자동화기기(CD/ATM), 신용카드, 전화(텔레뱅킹), 자동이체 납부 방식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음.
- 그리고, 지방세 납부방법도 2011년 1월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어느 은행에서나 어느 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서비스가 대폭 개선 됨.
- 우리 시의 경우 인구 밀집형 도시 형태로 금융기관이 많이 소재하고, 2011년부터 수납체계가 개선되면 시민들의 공과금 수납 불편이 전혀 없게 될 것임.
- 지방세 및 공과금의 납부여부 확인은 우리 시 홈페이지 지방세·세의 수입 사이트를 통해서, 가정이나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음.

□ 질문의원 : 김혜경 의원

- 모든 건축공사 발주 시 기계설비 공사를 분리 발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답 변)

-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는 전기공사나 통신공사처럼 개별법령에 분리 발주가 가능케 하는 규정은 없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의 금지)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음.
- 그러나 “공사의 성격상 공종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 공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따라서, 향후 건축공사 발주 시 당해공사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계설비공종을 분리 시 공함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분리 발주해 나가도록 하겠음.

복지문화국

□ 질문의원 : 한기천 의원

- 저소득층 65세 이상 노인등을 대상으로 위탁기관을 통한 중식을 제공함에 있어,
 - 부천시 전 지역 중식 제공 현황과, 현재 1인 기준 지원단가 2,000원으로는 부식이 부실하다고 판단되는바, 이를 3,000원으로 조정할 용의는?
 - 급식과 관련하여 위생상태와, 안전사항 등에 관하여 지도·점검 할 용의는?

(답 변)

- 우리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무료경로식당은 13개소의 1,328명에 706백만원, 식사배달은 13개소 611명 368백만원으로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1일 평균 이용자수가 20인 이상이고 주3회 이상 급식하는 경로식당에 무료급식을 지원하고 있는바,
 - 무료경로식당은 경기도운영지원계획에 의거 1인 1일 2,000원, 저소득 재가노인식사 배달은 1인 1식 2,500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 향후의 지원 단가는 우리시의 재정형편과 급식의 질을 감안하여 급식단가를 우리시 실정에 맞게 지원기준을 조정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음
- 또한 지도점검은 상시 50인 이상 운영하고 있는 경로식당 무료급식소는 집단 급식소 신고를 완료하였고, 금년 5월에는 위생부서와 합동으로 운영상황과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바 대체적으로 우수하였으며, 지적사항은 현지 지도를 통하여 시정토록 조치하였음. 하반기에도 위생안전교육 및 실태 점검을 통하여 급식소에 대한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급식사업 수행과 균형 잡힌 급식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 질문의원 : 안효식 · 서강진 · 장완희 · 김한태 · 박노설 의원

- 광역화장장 조성과 부평화장장 빅딜관련 대책 및 추진현황은?
- 화장장문제를 해결하지 못할시 시민의 불편사항과 역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 국가보훈단체원이라도 우선 장례비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 경기도 전체 화장장 장례비 차별철폐를 도지사에게 강력히 요청할 계획은 없는지?

(답 변)

- 지난 6년간 우리시에서 추진해온 추모공원 조성사업은 인근 지역주민과 서울시 구로구민의 반대로 진행되지 못하였으며, 시민들의 찬·반대립으로 불신과 갈등만 고조되었음.
- 시민들께서 불편 없는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은 경기도 권역별 광역화장장을 건립하는 것이라 판단하고 취임후 광역화장장 건립을 지난 7월 20일에 도지사에게 건의한 바 있음.
- 이와 함께 자체 화장장 건립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인근 지자체와도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공동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음.
- 인천 부평화장장 공동사용에 대하여는 우리시가 1일 평균 6명 정도의 시민이 화장을 하고 있어, 광역화장장 건립시까지 한시적으로 부천시민도 인천시민에 준하는 이용여건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인천시장과의 협의 노력하고 있음.
- 참고로 우리시의 대장동 하수처리장 등 기초환경시설이 인천시민을 위해 많은 편익을 제공해오고 있으며, 인천시가 2014년 아시안게임 개최시 우리시의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천시장에게 제안,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바 있으며, 부평구의 반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임.

- 화장장 건립 문제는 전국적으로 지역 갈등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중 화장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수원, 성남 2곳에 불과한 실정으로 시민들의 불편 없는 장례가 치러지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각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음.
- 국가보훈단체원 우선적 장례비 지원은 국가유공자에게 서울시 5만원, 수원, 성남시 등은 50%를 감면하여 화장장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시는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만 장례비 50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 경기도내 화장장을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지사에게 강력히 요청할 계획에 대하여는 지난 2008년 6월에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의 타 지역 주민에게 차등하여 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된 법을 근거로 성남, 수원시민에게는 5~10만원, 그리고 타 지역 주민에게는 100만원의 이용료를 부담케하고 있으나 광역 차원의 장사문제 대책 마련을 위해 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음.

□ 질문의원 : 안효식 · 당현증 · 장완희 의원

- 상임이사 채용과 관련하여 공정한 선정이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코드인사, 선거 전리품이라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심사위원 중 자격논란과 상임이사 임명에 관한 이사회에서 동료 이사들의 알권리를 묵살한 것에 대하여 정당하다고 보는지?

(답 변)

- 상임이사 채용선정이 공정하였는지? 코드인사 등에 관하여?
 - 우수한 문화전문가를 영입하고 채용과정에 있어서도 객관성,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2010. 8. 5. 상임이사 공개채용에 따른 긴급이사회를 개최하였고, 심사위원 선정에 있어서도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결정하였으며,
 - 특히, 임원추천위원회를 5명으로 구성하였고, 임원위원추천에 있어서 5명 중 1명은 부천시 추천, 1명은 부천시의회 추천, 나머지 3명은 이사회에서 추천하며, 이사회 추천 3명중 전문가 1명은 재단사무국에 위임 선정하여 구성하기로 의결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 구성하였음.
 - 또한 임원추천 위원회에서도 최종합격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상위 고득점자 2명의 점수가 비슷하여 최종 2배수로 이사장에 추천하는 등 보다 엄정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선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 임원추천 위원 중 자격논란과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는?
 - 2010.8.19 상임이사 선임 건의 이사회 진행과정에서, 일부 이사들이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자격과 심사위원들의 배점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한 회의진행 과정상의 문제로써,

- 이러한 사항은 2010.8.5 긴급이사회에서 모든 공개 채용의 심사 등은 임원추천위원회에 위임한다는 의결사항이 있으며,
- 임원추천위원 중 자격논란이 된 위원은 재단 사무국에서 부천시의회에 추천공문서를 보내 추천 받았음.
- 시의원 당연직이사 겸직금지 관련해서는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조례에 시의원을 문화재단 이사로 겸직하도록 되어있는 조항을 삭제하기 위해 2010.5.6. 방침결재, 2010.5.17~6.7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10.6.23.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가결, 2010.7.5. 안건제출, 2010.7.28. 제163회 임시회 의결, 2010.8.16. 공포하였으나 이에 따른 정관변경 시 의회 동의를 필요하므로 10월 제165회 의회에 안건 상정 예정임(2010.10.13~10.20).
- 문제를 제기하신 두 분의 이사는 2010. 8. 5. 긴급이사회에 불참하였기 때문에 다소 오해로 인하여 발생한 사항임.

□ 질문의원 : 안효식 의원

- 부천의 지명을 전통 계승시키는 유일한 민.관.학(심곡1동 주민자치위원회/심곡1동 주민센터/부천대학)합동축제인 진말몽당축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시장의 공약인 시민이 시장이요. 시민과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시민의 축제로 확대할 용의는 없는가?

(답 변)

-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천의 지명을 전통 계승시키는 유일한 민.관.학 합동축제인 진말몽당축제를 시민의 축제로 확대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진말몽당축제는 예로부터 내려오는 고유의 지역문화축제로서 그 지역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며, 참여자가 되어 축제를 만들어 나간다면 진정한 의미의 시민축제가 될 것임.
- 관 주도로 인위적 확대를 피하여 축제가 대형화 되면 될 수록 축제의 주인공인 지역민들의 입장에서 축제가 기획되고 개최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성과 규모를 확대하는데 만 치중하게 되고 주인공인 지역주민이 배제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됨.
-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과도한 지역축제를 억제하고 있고, 우리시도 축제의 통·폐합 등 효율적이면서도 차별화·특성화된 축제문화로 재 발돋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주민스스로 주체가 되어 주제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고유의 정체성을 확보할 때 진정한 시민의 축제라 할 것임.
- 따라서 프로그램의 다양성 등을 위해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나 재정적 확대지원 등은 검토 후 결정토록 하겠음.

□ 질문의원 : 당현증 의원

- 지난 피판 영화제가 영화인들과 관객들의 평가에서 역대 영화제 중 가장 성공적인 영화제였다고 하는데 성공의 기준은 무엇인가?
- 지난 5년 간 피판 티켓 판매수입 및 현황을 참고 하면 그 수치가 제 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줄어들었는데 이런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나 방안은?

(답 변)

○ 역대 영화제 중 가장 성공적인 영화제였다고 하는데 성공 기준에 대하여?

- 금년도에 개최한 제14회 영화제는 41개국 190여 편의 작품을 선보여 관객을 생각하는 영화제, 관객과 함께하는 영화제를 지향하고자 노력한 가운데, 지난 제13회 영화제에 비해 유료 관객의 경우 9.8%가 증가하였고 관객 점유율 측면에서는 1%정도 증가하였음. 아울러, 영화매진 기록도 전년도 보다 35회가 많은 122회를 기록했으며, 티켓 판매 수입 또한, 상영작품 편수와 예산이 전년도 보다 부족했음에도 3천 5백 여 만원의 수입이 늘어나는 등,
- 금년도 영화제는 차별성과 대중성을 지향하는 영화제로 탈바꿈하는 전기를 마련하였으며, 독특한 색깔과 무한 상상력으로 많은 영화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한몫하였음. 또한, 화려하진 않았지만 내실을 더해가는 영화제로 제 몫을 다해 관객들에게 호기심과 기다려지는 영화제로 자리매김을 하였음.
- 성공적인 영화제라는 평가의 기준은 다양한 시각과 관점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으나, 통상 행사기간 동안의 영화인 참여, 영화 관객 점유율, 영화 매진 등을 그 기준으로 삼고 있음.

- 언론 등 외부에서 금년도 부천영화제가 성공적이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는 올해 더욱 막강하고 놀라운 화제작들을 대거 선보여 언론의 중심에 올랐으며, 개. 폐막식은 물론 영화제 기간에도 국내 손꼽히는 영화배우들과 감독, 영향력 있는 영화계 인사들이 국내는 물론 전 세계의 아주 특별한 게스트들이 대거 방문하여 영화제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기대, 사랑과 신뢰를 몸소 보여준 영화제였다고 평가하고 있고 특히, 영화인들과의 사이에서 극복해야할 숙제처럼 여겨왔던 관계 정립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매우 긍정적인 평가에서 그 요인을 찾을 수 있을 것임.

○ 영화티켓 판매수입 및 관객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에 대하여

- 지난 5년 간 영화티켓 판매수입과 관객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도 영화제 관객수를 제외하고는 금년도 영화제가 판매수입은 물론, 관객수에서 가장 많은 영화제로 집계되었으며,
- 총 관객 수 산정은 통상 온라인 예매와 현장 판매로 구분하여 산정되나, 지적하신 티켓 판매(온라인·오프라인)수와 유료관람객 수가 똑같이 집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온라인 예매의 경우, 실제로 입장하지 않았더라도 예매된 티켓 발권 매수에 의해 관객 수를 산정하고 있는 현 실정으로 부산영화제, 전주영화제 등 타 영화제에서도 동일한 형태로 관객 수를 집계 하고 있는 실정임. 향후, 자원 활동가 및 체계화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보다 정확하고 투명한 관객 수가 산정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음.

□ 질문의원 : 원정은 의원

- 기존에 존재하는 무형문화엑스포 중요 문화행사를 부천시민의 여론수렴이나 동의절차 없이 취소하려는 타당한 근거는?
- 엑스포 폐지 결정은 문화도시 부천의 이미지 추락과 문화가 갖는 가치의 저 평가라는 논의가 대두되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대책은?
- 무형문화엑스포를 단순히 폐지할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개선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여 명품 문화축제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여론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대책은?

(답 변)

- 무형문화 엑스포 행사를 부천시민의 여론수렴이나 동의 절차 없이 취소하려는 타당한 근거에 대하여
 - 무형문화엑스포의 축소 및 폐지는 지난 6. 2 지방선거에서 시장으로 당선시켜준 중요한 공약사항 중 하나로, 이는 대 다수의 시민들이 무형문화엑스포 지속 개최를 희망하지 않고 있음이 선거과정에서 시민들의 객관적인 여론이 입증되었다 할 수 있을 것임.
 - 무형문화엑스포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면에서 폐지를 염두에 두고 있으나, 타 국제행사의 경우, 보통 3 ~ 4년 주기로 개최되고 있는 점을 감안 하여 금년 행사가 끝난 후, 객관성이 담보된 엄정하고 공정한 평가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향후, 부천시에 미치는 영향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검토해 나가겠음.
- 엑스포 폐지 결정은 문화도시 부천의 이미지 추락과 문화가 갖는 가치의 저 평가라는 논의가 대두되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대책에 대하여
 - 무형문화엑스포를 폐지하는 것이 마치 문화도시 부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거나 문화의 가치를 저 평가 한다는 논리는 옳지 않은 판단이라 여겨지며, 이는 선택과 집중의 문제라고 여겨짐.

- 부천은 그동안 10여 년 이상의 역사적 가치와 경쟁력을 갖춘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우리시가 자랑할 만한 국제적인 문화행사들이 자리 잡고 있음. 14년의 역사를 가진 부천국제판타스틱 영화제를 비롯 하여, 13회째 맞는 부천국제만화축제, 12회째 맞는 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 행사들이 바로 그것임. 부천은 이제 역사성과 인프라. 인지도 측면에서 가장 확실한 영화. 만화. 음악을 문화특별시 부천의 핵심 사업으로 육성 발전시켜 부천의 랜드마크적 문화행사로 재도약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이 절실한 여건에 놓여 있음.
 - 그동안 부천무형문화엑스포를 위해 정부와 경기도의 지원을 이끌어내 헌신적으로 지원하고 애써주신 무형문화 관계자들과 모든 문화 예술인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의 노력들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삶의 질이 충만한 품격과 특색 있는 문화 도시 부천의 브랜드를 한 단계 격상시켜 나가는데 노력을 다 할 것 임.
- 무형문화엑스포를 단순히 폐지할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개선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여 명품 문화축제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여론에 대하여
- 부천은 무형문화 관련 기반시설과 인적 인프라가 전무한 실정이며, 그동안 엑스포 준비 과정을 통해서 확인 되었듯이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에 많은 한계성에 봉착해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임.
 - 더구나, 무형문화의 경우 정부차원에서도 산업화와 생산성의 난관으로 전승과 보존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임. 따라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무리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그동안 충분히 검증 받은 인지도 높은 문화사업을 집중하여, 성숙되고 발전 지향적인 안목으로 지역 문화특성을 살린 신 문화도시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발전적 시각에서 바라봐 주시고 이해 해주시기 바람.

□ 질문의원 : 윤병국 · 경명순 의원

- 문화예술회관 원래부지 공약 번복하고 새로운 곳에 건립하겠다는 구체적인 대안은?
- 문화예술회관 건립 공약과 관련하여
 - 취임이후 검토한 내용 및 추진 일정은?
 - 오케스트라 전용 콘서트홀이 과연 필요한지?
 - 미술전시관 및 중앙공원 야외음악당과 연계 처리할 방안은?

(답 변)

- 문화예술회관 건립 공약과 관련하여 그간의 검토한 내용으로는 시민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시청 옆 구 문화예술회관 부지와 중앙공원 그리고 시민운동장 등에 대하여 관련 법규 저촉여부 및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중에 있음.
- 향후 추진 일정으로 9월, 10월중으로 본격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겠으며, 재원확보 여부 및 토지현황 등 제반여건에 따라 추진 일정이 달라지겠으나, 건축규모 및 품질 그리고 운영목표에 대한 연구용역을 2011년 예산에 반영 추진하겠음.
- 20년 전통의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오늘의 문화도시 부천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음. 앞으로 부천필은 시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과 함께 국내외 음악시장 마케팅을 통한 경영체계를 구축하여 문화특별시 건설에 한축으로 그에 걸 맞는 시설 인프라는 꼭 필요함. 콘서트 전용 홀의 의미는 오케스트라가 상주하며 건축음향 중심인 홀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케스트라 공연뿐만 아니라 PiFan과 같은 국제행사와 공연이 상시 연출되는 공간으로 사용하게 될 것임.
- 미술전시관과 야외음악당은 문화예술회관 입지 등 추진방향에 따라 연계하여 처리할 것이며 공연과 전시가 함께 제공될 수 있도록 복합 공연시설을 확보하여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에 최선을 다하겠음.

문화예술회관 건립 대상지 비교 검토

구 분	기존부지 내(중동 1153)	중앙공원 내
장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 시민약속 이행가능 • 민원 없이(최소) 추진 가능 • 지하철 7호선과 연결 접근성 최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공연장으로의 기능 및 주변 경관과 이용도 등 시청을 중심으로 한 문화의 중심화 형성 • 중앙공원 내 미관광장 지하주차장(988대) 연계이용 가능
단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회관 건립비용 확보 곤란 • 지구단위계획(특별계획구역) 결정취지 불부합 및 계획 변경에 대한 타당성 확보 곤란 (5년내 변경 불가 : '08. 10 결정) • 면적협소에 따른 시설 기능 축소 불가피(전시시설 등) • 외부공간 확보 어려움으로 중앙공원과의 입체적 연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회관 건립비용 확보 곤란 • 행정절차 재 이행에 따른 공약사업 지연 • 공원 기능 저하 및 이해당사자 반대(양면성 존재) • 중앙공원 내 기존 시설 활용 일부 제약 불가피 • 인근 주민들의 교통·소음 등 생활불편 민원발생 우려
종합 검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회관은 우리시의 중요 문화 인프라로 접근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시청 옆 기존 부지로의 이전을 공약으로 제시하였음. • 문제는 춘의동 부지 뿐 만 아니라 중앙공원부지등 여타의 지역에서도 재정대책이 가장 큰 과제임. • 재정확보 대책과 공약사항 이행 그리고 부천의 랜드마크적 개발이라는 명제를 놓고 법과 제도 그리고 주민선호도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최종적인 결정을 해야 할 사안임. • 우리시민의 이익이 최대한 반영되는 구체적 건립방안 확정 추진. 	
이 미 지 구상전경		

□ 질문의원 : 윤병국 의원

- 문화재단이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업현황, 복사골문화센터내 입주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현황 ?
- 위탁사업 중 문화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여성, 청소년, 사회복지 관련 사업은 위탁을 중지하고 별도의 운영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재단 사무국을 복사골 문화센터 밖으로 이전하여 문화재단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복사골문화센터는 건립 취지대로 여성, 청소년 복합 문화공간으로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

(답 변)

- 문화재단 위탁현황 및 복사골문화센터 입주현황
 - 위탁사업 : 9개 사업
 - 부천시여성회관, 부천시청소년수련관, 부천여성청소년센터, 산울림 청소년수련관,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부천시다문화지원센터, 부천영상미디어센터, 판타스틱스튜디오, 박물관(교육,유럽자기,수석,활)
 - 복사골문화센터 내 입주기관 : 9개 기관
 - 부천시보육정보센터, 부천시공산품전시장, 부천시평생학습센터, 부천시청소년상담센터, 부천시자원봉사센터, 한국예총부천지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부천무형문화엑스포사무국, 복사골스포츠센터
- 여성, 청소년 분야를 위탁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결여되고 문화재단 사업과 여성·청소년 사업이 중복되는 등 문화재단 조직기능 이원화, 업무의 효율성 저하로 문화재단이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생활문화를 공급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으로
 - 여성·청소년 분야를 위탁업무가 아닌 별도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음.
- 재단 사무국을 복사골문화센터 외부로 이전하는 문제는 적극 검토하겠으며, 복사골문화센터 공간 활용 문제는 여성·청소년 분야 별도 운영방안과 맞물려서 검토할 사항으로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함

□ 질문의원 : 윤병국 의원

- 위탁기간이 만료된 사회복지관에 대한 민간위탁 개선방안은 ?
- 무계획적으로 건립된 복지기관들에 대한 위치와 기능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답 변)

- 2010년 사회복지관 민간위탁개선(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2항에 의거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이 원칙이나 제23조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있어 우리시는 2009년까지 위탁기간 만료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해 재위탁을 우선적으로 해왔습니다.
 - 그러나 시의회 2009년 행정사무감사 및 2010년 주요업무보고 지적사항과 2010. 4.19 국민권익위원회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및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 개선방안」 권고문 내용 중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시 공개모집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라는 내용이 전국 지자체에 통보된 상태임.
 - 따라서 2010.12.31과 2011. 2.28에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3개 사회복지관의 위탁방법에 대해 여러차례 부천시 사회복지관협회와의 의사수렴과 다각적인 검토결과 한라종합사회복지관, 고강복지회관은 2009년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덕유사회복지관은 통일부 지정 경기 서부하나센터(북한이탈주민지원사업)의 연속성 유지라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할 계획임.
 - 또한 모든 사회복지시설 설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시 사회복지시설은 관련업무 담당부서별로 입법한 개별 조례로 위탁되어 상당한 비효율성을 지니고 있음.

- 이러한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 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의 의사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2011년 상반기내 부천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에 관한 단일 조례안을 마련토록 하겠음.
- 복지기관들의 위치와 기능조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말씀 드리겠음.
- 복지관들의 위치는 복지관별로 위탁 종료기간이 다르고 사회복지관 운영의 기본원칙인 지역성을 고려해 볼 때 이에 대한 조정은 향후 광역동 시행시 지역주민의 의사수렴을 선행하여 신중하게 판단토록 하겠음.
 - 복지관 기능조정과 관련해서는 2009년부터 보건복지부가 지역사회의 서비스 수요 및 공급 상황을 반영한 복지기관들의 특성화 및 다기능화 추진을 통해 시설 운영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2010년 1년간 ‘사회복지시설의 특성화·다기능화’의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있음.
 - 우리시 사회복지관(9개소)에서도 자발적으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역통합사례관리, 다문화가족지원, 북한이탈주민사업 등 특화프로그램을 추진중에 있으며 재가복지, 방과후 프로그램, 노인무료급식 등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단종복지관(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아동복지관)이 갖고 있는 접근성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향후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시설의 특성화·다기능화’ 2차 시범사업이 있을 경우 우리시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며 각 사회복지관에서도 기관의 특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음.

□ 질문의원 : 한혜경 의원

- 성별 영향평가 사업 및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하여
- 여성정책에 대하여
- 여성 노동자의 고용현실 등에 관하여
- 보육의 공공성 실현에 대하여

(답 변)

- 성별 영향평가 사업 및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하여
 - 2009년 성별영향평가가 13개 과제에서 3개 과제로 축소된 배경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임.
 -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 지침에 의하면 기초자치단체별 3개 이상 과제로 되어 있어 3개 과제를 선정 평가 관리하였으며 앞으로는 양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해 많은 과제를 선정함으로써 성별영향평가 추진에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 ※ 2009년 3개 과제 :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 기업자금 지원정책, 노인복지관 재가복지서비스 운영
 - 2011년에는 전부서별 1개 이상 과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현재 몇개 과제 시행중인지에 대한 답변임.
 - 성별영향평가 과제는 연초에 선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3개 과제를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부터는 전부서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 2010년 3개 과제 : 노인 일자리 사업, 외국인 지역사회 적응 지원 사업, 취약계층의 아동 지원 사업
 - 성별영향평가후에는 성인지적 예산편성 반영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임.
 - 국가재정법 제26조에 의거 중앙정부에서는 성인지 예산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현재 지방재정법이 개정 중에 있으므로 법 개정에 따라 2012년부터 성인지적 예산편성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제도 교육 이수자가 7, 8급으로 집중되어 있는 이유에 대한 답변임.**
 -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제도 업무담당자가 7, 8급 직원이 다수이고 교육 신청 접수 결과 7, 8급이 다수이었기 때문에 교육 이수자가 일부 직급으로 편중되었으나 앞으로는 팀장 이상의 간부 공무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 대상자 선정 방법을 개선하겠음.

○ **여성정책과 관련하여**

- **조례에 여성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행되지 않은 이유와 향후 계획안은 있는지에 대한 답변임.**
 -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여성정책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현재는 부천시 장기 발전 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각 업무별로 사업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 앞으로는 조례에 근거하여 여성정책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여성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 **전반적인 복지비 확충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임.**
 - 비전부천 2019 장기발전계획에 의거 여성분야 투자계획 예산이 2011년 979억원(2012년 1,040억원, 2013년 1,090억원, 2014년 1,128억원), 2015년 1,206억원(2016년 1,237억원, 2017년 1,274억원, 2018년 1,330억원) 2019년 1,386억원 등 연차적으로 확충하여 투자계획임.
 - 지방재정은 한정된 자원 범위 내에서 투자수요에 맞게 예산 반영하기 때문에 향후 중앙정부의 국도비 보조내시 및 투자 환경변화에 따라 수요를 예측하여 전반적인 복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겠음.
- **취업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자녀양육, 방과후 교육 등 각종 대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답변임.**
 - 취업여성의 경력단절 이유가 자녀양육이나 교육문제이기 때문에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시간 연장(최대 24시까지) 보육시설 57개소, 영아전담 보육시설 4개소, 영세아 전용 보육시설 6개소, 장애아 전담 및 통합 보육시설 18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육정보센터 주관으로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양육에 대한 교육 및 양육 상담,

놀이감·도서·의상 대여 등을 실시하고 있음.

- 또한 영아의 자녀를 두고 있는 취업여성을 대상으로 자택에서 전문적인 보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가정보육 교사를 가정에 연계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보육 수요에 맞춰 시간 연장 보육시설을 57개소에서 73개소로 확대 운영함으로써 취업여성 경력단절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음.
- **대졸이상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에게 적합한 교육 제공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임.**
 - 여성 취업지원 전문기관인 부천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해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해 매년 전업주부 재취업 지원 사업인 역사 체험 학습지도사 등 5개 과정을 교육시키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경력단절여성 직업훈련과정인 자연생태 체험 지도사 등 5개 과정을 추가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추가 수요 발생시 교육과정을 확대 하여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에게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겠음.
-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한 취업설계, 직업교육, 취업알선, 사후관리 등 체계적인 교육과정 수립이 필요한데 이에 대책에 대한 답변임.**
 - 관내에는 여성 취업지원 관련 기관 4개소가 상담에서 교육훈련, 취업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에서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여성새로일하기사업』을 시작하면서 취업설계(직업상담) → 직업훈련(경력 단절여성 직업훈련, 전업주부 재취업훈련, 여성가장 훈련 등) → 취업지원(1:1 취업알선, 찾아 가는 취업상담서비스, 주부 인턴제 운영 등) → 사후관리(복지 지원서비스)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앞으로 이러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관련 단체들과 상호연계를 통하여 많은 여성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정착시키겠음.
- **취업처 발굴 위해 지역 수요조사와 고용지원센터,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 등 지역네트워크 운영이 필요한데 이에 대책에 대한 답변임.**
 - 취업처 발굴 및 취업알선은 관계 기관의 유기적 연계 및 조정기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천일자리센터를 통해 구인업체와 구직자 간의

맞춤형 고용창출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고용지원센터, 여성 취업 관련 기관, 노인 및 장애인 사회적 일자리 단체, 직업 훈련기관, 소상공인 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네트워크 월례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개별 취업 지원기관 간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의 연계로 취업처 발굴 및 알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재취업에 성공한 여성에 대한 사후 관리가 부족한 실정으로 이에 대책에 대한 답변임.

- 재취업여성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근로자 직무향상 훈련, 고충 상담, 자녀 돌봄 서비스, 밑반찬 서비스 등 가사부담 완화서비스 및 여성 친화적 기업환경 조성사업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재취업에 성공한 여성에 대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일·가정 양립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여성 노동자의 고용현실 등에 관하여

-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현황, 임금, 노동시간 등 노동환경과 사회보장 및 복지수준 등을 조사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임.

- 경제활동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부천시 고용통계조사를 매 분기별 (3, 6, 9, 12월)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결과를 부천시 통계 사이트에 게시하고 있음.

- 고용통계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남·여·연령계층별 경제활동 참가율과 산업별, 직업별, 종사자 지위별, 취업 시간대별 등 취업 동향과 고용률, 실업률 등 고용통계 전반을 조사하고 있음

- 하지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노동 시간 등 고용현황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하고 있지 않으나 앞으로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고용 대책을 위해 고용 통계조사에 항목 삽입 등을 모색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보육의 공공성 실현 의지와 관련하여

- 광역동 추진에 따른 유휴 공간 활용 및 신축·리모델링을 통해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하겠다고 시장 공약을 발표하였는데 이에 대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실행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임.

- 영유아는 48,744명('09년말)으로 17,959명의 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

하고 있으며 599개소의 보육시설중 27개소의 국공립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영유아에게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공립 보육시설을 범박 및 옥길 지구(임대아파트)내에 2개소와 저소득층 밀집지역 취약지역중 국공립 보육시설이 없는 지역에 우선 2개소를 신축하고 뉴타운 사업지구내의 국공립 보육시설 6개소에 대하여는 사업 시행시 시설 규모를 확대하고 광역동 추진시 유휴공간을 보육시설로 활용하는 실행 계획을 향후 수립하겠음.

- **임기내 국공립 보육시설을 몇 %까지 확대할 계획인지에 대한 답변임.**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은 적정한 부지 선정 및 1개소 신축시 약 25억원의 많은 재원이 소요되어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보육시설의 질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평가인증에 많은 민간보육시설이 참여 하도록 하고, 단계적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을 4.5%에서 5.1%로 확대하여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음.

□ 질문의원 : 김문호 의원

- 중앙시장부터 부천대 주변까지를 청소년들에게 볼거리 및 공연장, 쉼터 등을 조성하는 문화의 거리를 조성할 용의는 ?
 - 옛 점자도서관을 청소년 쉼터인 공연장으로 만들고
 - 옛 중앙극장은 부천시 최초극장으로서 문화적 가치가 충분할 것으로 보아 청소년 공연장으로 할 계획은 없는지 ?

(답 변)

- 의원님의 지적대로 부천대 주변은 우리시의 청소년들이 자주 방문하는 거리이나 볼거리 및 공연장, 쉼터가 없는 실정임.
- 옛 점자도서관의 청소년 공연장 조성에 대하여 ?
 - 옛 점자도서관은 1965년 준공되어 농촌지도소로 활용하다가 1999년 3월 이후부터 점자도서관, 시각장애인협회, 진말경로당으로 사용해 왔으며, 본 건물은 2008년부터 현재 일반재산으로 등록되어 있음.
- 따라서 공연장으로서의 적합성과 재산관리 부서와 협의하여 적극 검토 하겠음.
 - 건물현황
 - 소유자 : 부천시
 - 주 소 : 원미구 심곡1동 454-1
 - 건축년도 : 1965년
 - 대지면적 : 596㎡
 - 건축연면적 : 482.65㎡ (1층 228.1㎡, 2층 254.55㎡)
- 옛 중앙극장을 청소년 공연장으로 활용할 계획에 대하여 ?
 - 중앙극장은 현재 건물주와 토지소유자가 2개 법인으로 되어 있으며, 먼저 매각 의사를 확인한 후 재정적 검토를 하겠음.

- 건물현황

- 건물명 : 중앙극장
- 주소 : 원미구 심곡1동 349-3
- 대지소유자 : 아시아신탁주식회사
- 건물소유자 : 주식회사 에이치엔디
- 대지면적 : 933m² / 지하1층 지상3층
- 건물연면적 : 1,735.53m²
- 건물용도 : 극장 및 그린생활시설(점포)

- 문화의 거리 조성에 대하여는 위 공연장 시설 대상지 외에 주변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볼거리 및 쉼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우리시에서는 상1동 일원의 둘리의 거리를 조성하였으나 현재 활발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문화의 거리” 성공적 조성을 위해서는 성공사례를 참고하여 부천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상인, 시민들의 꾸준한 자발적인 노력하에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발전될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며,
- 참고로, 비교적 성공적으로 운영중인 “부평 문화의 거리”는 상가 건물주 모임인 “상가번영회”와 상인조직인 “문화의 거리 발전추진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10여년간 조직을 통한 사업 및 관리를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성공적으로 조성되고 있음.

□ 질문의원 : 김한태 의원

- 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교육박물관, 수석박물관, 유럽자기박물관, 활박물관의 관람객수 감소와 입장료 수입 감소 등 경영이 악화 되고 있는데 박물관 운영의 생산적인 방안과 대책은?
- 박물관의 유물 기증자들이 관장직을 맡고, 전체 박물관 운영예산 중 인건비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통합관리 운영하는 박물관장직을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 변)

- 현재 종합운동장에 있는 박물관은 문화도시에 걸 맞는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2003년도에 개관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박물관으로 개관 당시에도 박물관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한 후 적정한 장소에 종합박물관을 신축하여 시민에게 전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복합문화시설을 계획하고 있으나 시의 재정형편상 늦어지고 있는 상황임.
- 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박물관의 관람객수가 감소하고 있고 경영측면으로 볼 때는 생산적이지 못한 것이 사실이나 현재 국립중앙박물관도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등 박물관이나 전시시설을 경영측면 보다는 문화공간 제공 쪽으로 정책을 펴는 상황임.
- 다만,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박물관장과 학예사 등 박물관 운영 인력의 인건비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바 업무량, 유물기증자에 대한 예우, 타 자치단체의 박물관 운영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박물관장의 통합운영 여부와 적정한 인력을 진단하여 박물관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개선하여 나가겠습니다.

□ 질문의원 : 박노설 의원

- 삼정동 소각장 폐쇄이후 부지 및 건물 활용방안에 대하여
 - 복합 문화시설로 활용방안 추진경위 및 시설계획은?
 - 활용방안 결정과 관련하여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할 의향이 있는지?
 - 주민협의체 및 푸른마을회에서 스포츠 센타,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요구하고 있고 지역 주민들은 신흥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또는 한시적 사용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반영 할 의향이 있는지?

(답 변)

- 삼정동 소각장의 재생 방안에 대한 추진경위는 민선5기가 들어섬에 따라 많은 시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매우 높아 이 모든 것을 담아내기에는 재정 여건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부천시민 모두에게 자긍심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한 끝에 방치된 유휴시설을 적은 비용으로 리모델링하여 새로운 문화 복합시설로 재창조하는 정책 방안을 설정하게 된 것임.
- 민선5기의 시정철학은 소통으로 최종적인 시설계획이나 콘텐츠 개발은 시민여론수렴을 통한 소통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동력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방안을 결정하게 될 것임.
-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삼정동 주민협의체 및 푸른마을회, 그리고 신흥동 주민자치센터의 요구사항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일반시민 의견도 열린 시장실을 통해 많은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이러한 모든 요구를 모두 수용할 수 있으면 좋겠으나 요구하는 용도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시설비로 213억원과 연간 수십억의 운영비가 필요하며 공간도 최소한 2배 이상은 있어야 할 것임.
- 따라서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이러한 전면적인 리모델링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 예상되나 환경적, 교육적, 역사적, 문화적 가치와 미래지향적 비전을 담은 생산적 복합문화 시설이 되도록 다양한 의견과 지혜를 모아 추진하겠음.

□ 질문의원 : 김현중 의원

- 영상문화단지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위한 견해는?
-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서커스 상설 공연장의 잔여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시민이 필요로 하는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견해는?

(답 변)

○ 영상문화단지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하여

- 영상문화단지는 그동안 난 개발의 후유증으로 많은 행정력을 소모되었으나, 행정대집행 및 그에 따른 소송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임.
- 따라서, 향후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중. 장기적인 안목으로 영상문화단지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의 필요성에 따라 2010년 본 예산에 용역비 140백만 원을 확보하여 중. 장기 활용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준비 중에 있으며, 전문가 및 시민 제안을 통한 참신한 아이디어도 함께 수렴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수립코자 준비 중에 있음.
- 용역 주요 과제로 유보지의 활용도 제고를 비롯하여 기존시설과 추가 시설의 조화로 시너지 효과 거양 방안 및 도시계획 변경을 포함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마스터플랜 수립 등의 방안을 찾고자 함.
- 아울러 우수지와 굴포천, 호수공원 등을 포함한 영상문화단지 일원을 일체된 관광지로 지정받도록 추진하여 민간자본이 참여하는 테마파크를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음.
- 영상문화단지는 2012년 지하철 개통 등 사통팔달의 교통여건과 배후에 대단위 아파트 등 인구밀집 지역이라는 호 조건을 활용하여 문화특별시 부천의 미래를 선도하는 한 축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심혈을 기울여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음.

○ 서커스 상설 공연장을 조속히 준공하여 문화공간으로의 활용에 대하여

- 현재 서커스 상설 공연장은 85%의 공정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어 있으며, 시행사인 (주)동춘의 자금조달의 무능력과 사전분양 등 불법행위로 인하여 2008. 12. 15자로 협약을 해제하고, 같은 해 12. 30자로 부천시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 완료해 놓은 상태임.
- 이런 과정에서 (주)동춘이 『계약해제권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부천시가 승소한바 있으나, 원고의 항소로 9. 28일 항소심에 대한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며,
- 시공사 (주)준 건설이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의 소 1심에서는 원고에게 우리시가 67억여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으나, 법리적인 다툼과 손해배상금 등에 대하여 우리시의 근본 입장을 간과한 판결로 지난 8. 26일 항소장을 제출해 놓은 상황임.
- 향후 시의회에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 승인을 받아, 이해 당사자 간의 소송을 통하여 법원에서 결정된 당사자에게 이득금 반환 후, 잔여 공사비 조속한 확보를 통하여 문화특별시 부천의 위상에 어울리는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다목적 공연시설의 문화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도시 환경 국

□ 질문의원 : 당현증 의원

○ 반달어린이공원이 오래 전부터 우범지대로 존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답 변)

- 반달어린이공원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사이에 있는 공원으로 학생들의 이용이 많고, 인근 자동차매매단지 이용객들의 왕래가 많은 장소임.
- 노후한 공원 시설과 밀식된 수목으로 인해 공원 환경이 열악하여 우리 시에서는 안전하게 공원을 관리하고자 방범용 CCTV 1대를 2010년에 설치하였으며, 야간 치안유지를 위해 경찰서·지구대에 취약시간대 순찰 강화를 요청하였음.
- 하반기 지역공동체사업을 활용하여 수목전지 등 환경정비를 우선 시행 우범화를 예방하고, 2011년도 반달어린이공원 정비 사업비를 확보 노후 시설물 및 보안등을 재정비토록 하겠음.

□ 질문의원 : 경명순 의원

- 중2동 위브더스테이트 제5호·7호 주차장 공원화 추진 공약에 대해 어떠한 방법으로 이행될 것인지?
 - 우선 지상공원만 조성할 경우 주차난으로 고통 받을 상가이용자들의 주차난 해소방안은?

(답 변)

- 중동1108, 1115번지상의 제5호·7호 공영주차장에 대한 공원화사업은 2010. 8. 24 주민설명회 결과 지상에 공원조성을 요구하는 의견으로 집약되어 공원을 우선 조성할 계획임.
- 공원조성방법은 지구단위계획변경기간 미도래에 따라 주민제안으로 지구단위계획변경 후 도시계획시설을 공원·주차장으로 중복결정하고, 주민제안에 따른 지구단위계획변경,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공원조성 계획수립 및 실시설계,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 추진에 따른 소요기간이 약 1년 정도 소요됨에 따라 2011년에 위의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2012년에 공원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기존의 주차장을 공원화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주차난에 대하여는 위브더스테이트 이면의 일방통행길 한쪽 면에 노상주차장 설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동 건물 지하 1층에서 6층간 지하주차장이 조성되어 있는 바, 상가번영회와 입주자간에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주차장의 효율적 이용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 향후 상가의 활성화 및 주차수요가 발생할 시에는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지하주차장조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음

□ 질문의원 : 강병일 의원

- 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MBT)이 준공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이 부천시인지? 아니면 시공사인 대우건설인지?
- 부천시는 결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그간 어떤 조치를 하였으며 앞으로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

(답 변)

- 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MBT)은 원만히 공사가 진행되어 예정된 기일에 준공이 이루어져 정상적인 운영이 되어야 하나 아직까지 준공을 못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 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MBT)은 설계·시공 입찰(TURN- KEY)방식으로 경쟁 입찰하여 시공사인 (주)대우건설이 선정 되었습니다. 이는 계약 상대방으로 선정된 (주)대우건설에서 설계와 시공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완공하여 발주처인 부천시에 인계하도록 되어 있음.
- 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MBT)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하여 그동안 대책회의, 전문가 자문, 벤치마킹 등을 통해 많은 노력을 기울려 왔으며 그 결과 현재는 많이 정착되어가고 있음.
- 많은 사람들이 MBT시설 자체가 전혀 가동이 되지 않는 것으로 대화 과정 또는 여론을 통해서 알고 있음.
- 하지만 MBT 시설물에 대한 공사는 완료한 상태이나 계약서, 입찰안내서 및 부천시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준공에 이르지 못하는 사항임.
- 현재도 쓰레기 함수율이 30% 미만에서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가능 하나 당초 함수율 30%를 기준으로 시공 하여 50~60% 정도의 고수분 쓰레기 반입 시 정상 가동하지 못하는 착오가 있음을 발견 하였으며 그것을 보완 중에 있음.

- 현재는 고수분 쓰레기를 처리하면서 발생하는 과부하를 보완하는 마지막 단계로 볼 수 있음.
-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9월 중 설비 보강을 완료한 후 10월 중순 이전에 각종 성능테스트를 거쳐 늦어도 10월 중에는 준공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10월 중 정상가동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 질문의원 : 김현중 의원

- 상동호수공원의 부족한 휴식공간의 확보 등 개선방안은?
 - 부족한 녹지공간 및 편의시설의 확충할 용의는?
 - 약품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호수에 고인물의 수질개선 방법은?

(답 변)

- 상동호수공원은 당초 논(畓)으로 사용하던 곳을 매립하여 공원으로 조성된 지역으로 배수가 제대로 안되어 수목활착이 어렵고 상록수가 적어 여름철 공원에 그늘이 없으며 동절기에도 황량한 상태임.
- 2007년부터 각종 재개발, 재건축 등에서 기증수목 발생시 우선하여 이식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꾸준히 보식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배수 불량으로 수목의 활착이 왕성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며, 이후에도 예산을 확보하여 배수 불량지를 정비하고 가제보 등 그늘시설물 설치와 습기에서 잘 자라는 수목을 식재하여 푸르고 쾌적한 공원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음.
- 호수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현재 수처리시설을 도입하여 모래여과기능을 첨가한 가압부상분리법으로 25,500m²의 면적과 10,000여톤의 담수용량의 수질개선을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협력하여 생태호수를 효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물순환 시스템 구축 및 수질 모니터링장치를 설치하여 물순환 건전성 평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등 수질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음.

□ 질문의원 : 김현중 의원

○ 조성된 지 7년째인 시민의 강에 대하여 친환경적이고 시민이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리모델링 등 “시민의 강 개선방안”은 있는지?

(답 변)

- 시민의 강 관리는 2007년부터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연중 제초, 전지, 병충해 방제 등 수목관리와 산책로 및 수로 청소 등을 실시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인접 동 및 학교, 자생단체 등에서 생태학습 및 봉사활동 등의 공사를 한 바 있음.
- 그 간 미흡한 수목 보완을 위하여 경기농림진흥재단의 도비지원으로 수목 및 야생화 20,700본을 식재하였으며(2008), 주민 이용편의 및 경관 개선 등을 위하여 자연석 쌓기, 체육시설물 설치·목교 및 휴게시설 정비 등을 실시하였음.
- 2010년 현재는 상2, 3동에서 주관하여 시민의 강 녹지대 주변에 시비 및 LED조명 등을 이용한 조형물 설치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 노후하고 훼손되어 불편을 주고 있는 산책로를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사계절 꽃과 열매, 단풍을 볼 수 있는 다양한 수목과 야생화를 식재할 계획임.
- 또한, 수질 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수질정화 식물 식재, 자생단체들의 생태학습 및 봉사활동 유도 등으로 이용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걷고 싶은 친수공간이 되도록 시민의 강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 질문의원 : 김현중 의원

- 청계천 복원을 통해 친환경물길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는 현시점에서 경인아라뱃길과 “굴포천 물길연결사업”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 변)

- 우리시에서는 2009. 5월부터 경인아라뱃길과 굴포천을 연결하는 운하를 건설하여 서부수도권 내륙의 물류 및 수상 테마관광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부천운하 건설사업 기본구상(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용역을 추진하였으며,
- 부천운하계획의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 물류수송을 위한 운하건설은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오염된 굴포천의 수질개선 및 자연친화적인 하천을 조성하여 시민의 여가 및 친수공간을 제공하고자 굴포천 물길연결사업으로 계획을 변경하였음.
- 다만, 굴포천은 부천 등 5개 지방자치단체(부천,김포,부평,계양,강서)가 경유하는 하천이며,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상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추진은 불가능한 실정으로 국가차원에서 일괄적인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시에서는 경기도와 연대하여 굴포천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 건의하여 국토해양부에서 적극 검토 중에 있음.

□ 질문의원 : 김현중 의원

- 상동 길병원 부지가 수년 동안 도심속의 흉물로 방치되고 있으며, 그간 병원건립을 위해 환매조건방식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특별한 결실이 없는바 향후 부천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 변)

- 우리시에서는 병원건립을 위하여 민원사항 통보 등 지속적인 협의(30회) 및 촉구를 하였으나 길재단 측에서는 경제성을 이유로 병원 건립을 지연 시키고 있으며, 동 부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여 병원을 건립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였으나 무산된 바 있음.
- 금년 3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민원해결을 위해 현지를 확인 길재단과 협의하여 금년 상반기 중에 종합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할 계획이었으나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어 아직까지 계획을 미수립한 상태임.
- 우리시에서는 시민과 공조체계를 유지하는 등 길재단 측과 적극 협의 토록 하겠으며,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건설교통국

□ 질문의원 : 강동구 의원

- 시내버스 차고지 관련
 - 부일교통의 오정구 작동 248-1번지상의 버스차고지에 대해 신고사항외에 불법행위와 무단 점용에 대한 조치사항은?
- 시내버스 양도양수 및 노선 신설변경 관련하여
 - 지난 5월 31일 마을버스업체인 성광운수와 부천버스의 노선 양도양수 및 신규면허와 관련하여?
 - 노선 33번 인가와 형식적인 공모 및 특정업체의 비호 의혹에 대하여

(답 변)

- 시내버스 차고지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부일교통은 2005년 9월 2일 3개 마을버스 업체가 통합하여 31대 5개노선으로 시내버스 면허를 받아 현재 9개 노선 69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2005년 면허 당시 차고지는 소사구 소사본동 184-37외 2개소에 차고지를 확보하였으며, 현재는 소사본동 184-37(449.7m²), 소사본동 414번지(530m²) 및 상동 621-2번지(1,480m²)의 3개소를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음.
- 지적하신 개발제한구역인 오정구 작동 248-1번지는 시내버스로 면허를 받기 전인 마을버스 때부터 사용한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동 지번상 차고지 신고는 없었으며, 이러한 불법 점용에 대하여는 2002년부터 2010년까지 14,850천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여 징수 하였으며, 2004년 6월에는 원상복구 및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부천남부경찰서에 고발조치도 한 바 있음
- 동 차고지에 대하여는 2010.09.30일까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인가받은 차고지로 이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 다음은 성광운수와 부천버스의 시내버스 양도양수 신고수리와 면허 처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2010.06.03 마을버스 성광운수에서 시내버스인 부천버스의 95번 노선 18대를 양수 처리하였습니다. 양도양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 성광운수의 주사무실인 소사구 송내동 308-1번지 현장 확인없이 민원서류를 처리한 것은 동 사무소를 금년 2월까지 성광운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을 담당자가 잘 알고 있었기에 면허 당시에도 사용하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음.
- 또한, 2010.06.04일 경기도의 양도양수가 법적으로 부적합하여 재검토 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허를 수리한 것은 우리 시 법규 해석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며, 최근 국회의원 조경태님의 9분이 우리 시가 처리한 내용과 유사한 내용의 법 개정을 발의중에 있음.
- 처리 기한이 5일인데 하루 전에 처리한 것이 잘못이라고 질의하였는데 민원서류는 가능하면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공무원으로서의 당연한 사항이라고 생각함.
- 현재 본 양도양수건 및 면허처분과 관련 하여는 지난 7월 경기도의 부천시 종합감사시 지적이 있어 감사 결과가 현재 진행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계획임.

- 다음은 33번 시내버스 노선인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부일교통 33번은 기존 53-1번 버스 9대가 송내역에서 부천시청까지 운행하였으나 부천시청 앞 버스정류장관련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고강동 주민들이 상동 ↔ 송내역을 운행하는 버스 노선을 요구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 53-1번을 변경하여 2009.12.21일 33번 신규노선을 만들었음.
- 그러나, 국토해양부 훈령 제353호 규정에 의거 “신규노선 인가시 관련 사업자에 대한 균등한 기회(노선 공모)를 부여해야” 하는 데, 단순 업무 미숙으로 공모를 하지 않은 부분이 발견되어 2010.03.31일 노선인가를 취소한 후 적법 절차를 통하여 소신여객 23번이 선정되었으며.
- 이 과정에서 우리 시는 증차없이 운행이 가능한 신규노선 참여를 공모 하였으나 증차를 수반하는 의견을 제출한 일부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은 것에 대한 오해소지가 있다고 사료됨.
현재 본 건과 관련 하여 시청 감사실에서 조사중에 있음.
- 다음은, 역대 노선인가와 관련하여 특정업체를 비호를 하였다는 지적에 대하여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 노선 변경(연장, 단축, 경로변경 등)이나 노선 신설, 증차 등(이후 노선변경이라 하겠습니다)은 의원님들이 관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노선변경을 시에 요구하는 것과 전화나 시장에게바란다 등 다양한 전달 매체를 통하여 노선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게 대부분이며, 업체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정책적인 필요에 의해서도 노선변경이 이루어짐.
- 노선변경에 대한 인가 절차는 업체에서 노선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변경에 대한 필요성(이용 시민의 편리성, 불편사항, 민원 등) 및 법 적합성을 검토하여 인가 수리 여부를 결정함.
- 노선 검토 결과 지나친 노선변경에 따른 업체간 과당 경쟁 유발 및 기존 이용 시민의 심각한 불편이 수반될 것이 예상되는 노선변경에 대하여는 업체 의견 및 동주민센타를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인가 수리하고 있음.

□ 질문의원 : 안효식 의원

○ 버스공영차고지에 대하여

- 종합운동장옆 그린벨트에 차고지를 조성하여 옹기면, 도심의 환경 문제와 교통문제가 동시에 해결될 것 같은데 시장께서는 검토해 볼 용의가 있는지 ?

(답 변)

- 우리시의 공영차고지 수용 능력은 전체 인가 대수 726대의 29.2%로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고강동에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고 있음.
- 고강동 공영차고지가 완공되면 대부분의 차고지 부족이 해소될 것으로 사료됨.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정구 여월동 산37-1번지 일원의 종합운동장 옆은 개발제한구역으로써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체육공원으로 시설결정된 지역이며 도심지 한가운데 위치하여 향후 지하철개통시 역세권역으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로는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사료되오며 향후 차고지 부족시 도심외곽지역 등에 검토하도록 하겠음.

□ 질문의원 : 김인숙 의원

○ 교통정보수집 제공장치 관련 및 차량단말기 기기 선정과정은?

- 부천시는 차량단말기를 지원하는데 있어 구체적 실현 목적이 무엇인지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모니터링 하고 분석한 자료가 있는지?
- 차량단말기의 기기 선정과정에서 업체 선정과 기기선정 기준을 밝혀주시고 선정 업체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지?

(답 변)

○ 차량단말기의 구체적 실현목적과 활용 및 분석자료, 기기선정 과정에서 업체선정과 기기선정 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도시교통정보수집시스템(UTIS : Urban Traffic Information System)은 인구20만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교통정보수집 및 제공체계를 구축하고자 경찰청이 주관하여 국비 100%를 지원받아 추진된 사업으로 차량내 설치되어 있는 차량내 통신장치(OBE:On Board Equipment)와 차량단말기(CNS:Car Navigation System)는 각각 운전자가 도로 주행시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활용되고 있음.
-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교통상황정보는 센터에서 실시간으로 가공되어 도로전광표지, 인터넷, 차량단말기, 교통방송을 통해 제공되고 있으며 축적된 자료는 부천시 도로별 정체 상황을 분석하는 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 도시교통정보수집시스템 구축사업에 있어 기기 규격 결정, 사전성능평가(BMT: Bench Marking Test), 설계 등을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이 주관하였으며, 우리시에서는 경찰청의 최종 검증을 통과한 업체 중에서 시공사에서 납품한 제품을 전면책임감리단의 검토의견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였음.
- 교통정보 분석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질문의원 : 안효식 · 김한태 의원

○ 춘의사거리 고가차도 설치 관련

- 사전 주민설명회 개최 방식 및 결과는 ?
- 건설 중단 및 평면교차 전환에 대한 견해와 추진계획은 ?

(답 변)

○ 춘의고가차도 설치에 따른 사전 주민설명회 개최는

- 2004년 4월 23일 부천시청 대강당에서 지하철7호선연장건설사업과 연계한 환경·교통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가진바 있으며,
- 또한, 2006년 3월 23일 춘의동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의에 춘의고가차도 계획에 대해 설명시 동서간 고가차도축을 남북간 지하차도축으로 변경해 줄 것에 대한 의견이 있었으나, 지하철과 연계 시공중인 고가차도의 설계변경 및 재시공은 사업기간 장기화와 추가사업비 재투입 등으로 변경(취소)은 어렵다고 설명하였음.
- 그 후 2007년 5월 25일 춘의동 주민센터에서 지하철7호선 연장건설공사의 추진사항 주민설명회시 재차 춘의고가차도는 지하철공사와 병행시공중으로 계획변경이 어렵다는 설명을 하였음.

○ 춘의고가차도 건설에 따른 견해 및 추진계획에 대해

- 춘의고가차도는 우리시 교통개선대책의 일환인 춘의로 확장공사로써 '98년 실시설계용역 당시 교통영향평가에서 본구간은 입체시설(고가차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 결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 시점에서 시설변경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 주변 환경과 도시미관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고가차도는 지양하는 추세인 점과 앞으로 뉴타운개발등의 도시계획측면을 감안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면에서 검토중에 있음.

□ 질문의원 : 윤병국 의원

○ 장애인 콜택시 관련

- 우리 시는 지난 4월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이동 지원 센터를 설치하여 연중 운영하기로 했음.
- 시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임에도 4개월여가 지나도록 아직까지 관련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 대해 질문하오니 진행이 늦어진 사유와 그동안의 진행 경과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답 변)

○ 장애인복지택시 운영현황 및 향후계획

시별	최초운행 개시일	운영주체	운영 대수	기준 대수	확보계획	이동지원 센터설치	비고
부천	2005. 12	법인택시	8	40	32대 (영업용택시임대)	2011년	

- 현재 부천시 장애인복지택시는 2005. 12월부터 현재까지 총8대로 운영 중에 있으며 그에 따른 교통약자 이동지원(콜)센터를 관내 법인택시인 삼신교통에서 운영하는 삼신(콜)센터에 민간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 이용자에 비하여 현재 8대로는 턱없이 부족하여 향후 총40대의 장애인 복지 차량 증차로 효율적인 복지택시의 운영을 위한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고자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동지원센터 2개소(대전,수원)를 벤치마킹 하였음.
- 아울러 금번 2010년 5월17일에 제정 공포된 부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6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의거 향후 32대분에 대한 년차별 증차 계획에 따라 추진하겠으며,
- 향후 장애인복지택시 운영주체를 현재 8개사 법인택시에서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등에 관리 위탁과 2011년까지 이동지원센터를 설치 개소할 예정임.

□ 질문의원 : 경 명 순 의원

○ 송내역 북부광장 주변정화 및 교통체계 개선책은?

(답 변)

- 송내역 북부광장은 현재 22개 노선의 시내버스와 택시 승강장 및 자전거 주차장으로 잠식되어 출·퇴근시간에 교통체증이 심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항상 존재하고 있음
- 시에서는 송내역 북부광장의 근본적 교통체계 개선대책과 고질적 노점상을 근절하고 광장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하여 국·도비를 지원받아 송내역 북부광장의 시내버스노선을 정비하고 서촌공원 공영주차장에 교통환승센터를 건립하여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역 광장의 기능회복 및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금년 9월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등 행정절차를 2011년 까지 이행하고 2012년도에 공사를 추진, 12월에 완공 예정임.
- 사업이 완료되면 노점상도 정비되고 버스와 택시 승강장의 분리 및 자전거주차장은 지하화 되고, 사거리를 회전교차로로 개선함으로써 역광장의 기능을 되살려 깨끗한 모습의 역광장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게 될 것임.

□ 질문의원 : 윤 근 의원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활용 방안은?
 - 외곽순환고속도로 지·정체 완화방안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와 협의 진행사항은?
 - 하부공간에 주민들이 주민등록 전입 후 거주한다는 제보가 있는데 주민등록법상 고속도로 하부공간에 전입이 가능한지?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지정체 완화 타당성 용역완료 후 하부공간 전체가 사용이 가능할 시 예정대로 체육시설과 2010년 7월에 종합운동장 공영주차장에 이전한 견인차량보관소가 하부공간 장소로 이전이 언제쯤 가능한지?
 - 하부공간에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대형차량, 버스 등의 무단점유물의 조치방안은?

(답 변)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활용방안에 대한 답변임
 - 우선, 외곽순환고속도로 지·정체 완화 방안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와 협의 진행한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국토해양부에서는 외곽순환고속도로 장수~계양간 지·정체 완화 실행방안에 대한 우리시 및 주민 요청사항(하부공간 도로 지하화 추진, 동수로 연결방안 등)은 수용할 수 없는 입장으로서 완화방안에 대해서 무산된 것으로 판단하고 중지된 상태이며, 외곽순환고속도로 지·정체 완화를 위해 장래 필요시 하부공간을 도로로 활용하기 위해 검토중에 있음
 - 아울러, 하부공간을 견인보관소 및 체육시설 등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국토해양부가 제시한 하부공간 양측도로 접속에 대해 부천시가 수용할 경우 가능하다는 입장이며, 협의도 한국도로공사 계획이 확정된 이후 가능하다고 회신됨에 따라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다음, 주민등록법상 고속도로 하부공간에 전입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행 「주민등록법」상 거주지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며, 일반적으로 주민등록법제6조(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자를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규정에 의거, 전입 신고자가 신고서의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여 신고하는 경우 수리거부를 할 수 없음.
 - 다만,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의 소유주체인 한국도로공사 인천지사로부터 해당지역에 대한 전입신고 제한 요청이 있어, 2009년 11월 이후 추가적인 전입신고는 수리하지 않고 있음.
- 다음, 체육시설과 2010년 7월에 종합운동장 공영주차장에 이전한 견인차량보관소가 하부공간 장소로 이전이 언제쯤 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체육시설물 설치사업은 1년 6개월정도(실시설계용역 6개월, 공사기간 1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2006. 10월 도로공사와 사용협약 체결을 하였고, 그해12월 하부공간 시설배치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07. 3월 사용협약이 일시 중지된 상태로 현재는 국토해양부에서 외곽순환도로 대체도로 기본설계용역 지연에 따라 하부공간 사용에 대한 승인이 지연되고 있어 체육시설물 활용을 못하고 있으며 향후 하부공간 사용승인시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등 13개 종목의 공공체육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 부천시 견인보관소는 중동에 위치한 제7호 공영주차장 부지에 설치되었으나 2007년 11월 워브더스테이트가 입주완료되어 주거 밀집지역으로 변화되어 주변 거주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었고 최근 보관소 인근에 초고층아파트 리첸시아 공사가 상당히 진척되어 중첩민원이 예상되어 견인 보관소 이전이 시급한 상황이었음.
 - 부천시 견인보관소의 시급한 이전을 위하여 한국도로공사 측에 부천 견인보관소 영구적 사용 예정지인 외곽순환도로 하부 공간을 사용하도록 해 줄 것을 협조요청 하였으나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지정체 완화 공사계획이 확정된 이후 협의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음.

- 서울외곽순환도로 하부 공간 이전이 상당기간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하부공간 이전 시 까지 임시 사용할 부지를 시 전체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전면 검토한 결과 현재의 부지가 가장 적합하여 임시 이전하게 되었음.
 - 향후, 서울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 견인보관소 부지 사용이 가능하게 될 경우에는 즉시 이전하도록 하겠음.
- 다음, 하부공간에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대형차량, 버스 등의 무단점유물의 조치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음.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교량하부의 고철, 야간박차 차량 등 불법 적치물에 대한 단속은 도로 관리자인 한국도로공사(인천지사)에서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나 도로공사에서 관리가 미흡하여 우리 시민들이 상당한 피해와 불편을 겪고 있음.
 - 우리시에서는 이를 체계적으로 대책코자 종합적 추진 T/F 팀을 구성하여 조속히 현장조사 및 실태파악 후 개별법에 의한 위법사항을 정리하고 종합대책을 마련(단속기준 및 일정)하여 관리자인 도로공사와 공조하여 빠른 시일내 조치토록 하겠음.

□ 질문의원 : 윤 근 의원

○ 돌리거리 불법광고물 전단지 단속방안은 ?

- 돌리거리, 투나 부근에 선정적인 유흥업소 전단지가 승용차, 전화 부스 안, 거리등 선정적인 전단지 광고물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음
- 청소년 유해전단지 단속에 있어 청소년 보호법의 성매매업소 단속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를 2009, 2010년 부과실적과 향후 불법광고물 전단지 단속 방안은?

(답 변)

- 무차별적으로 살포되는 선정적인 유흥업소의 전단지는 차량,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저녁에 돌리거리, 중동먹거리, 투나부근 등에 살포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전단지를 살포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단속을 하기에는 사법권이 없는 시 공무원으로서는 살포된 전단지를 줍는 수준의 한계가 있음.
- 유해광고물 수거는 매일 새벽에 이들 지역을 청소하는 분들이 수집한 것을 청소과를 통하여 전달받고, 일부는 주민들이 직접 가져오는 것을 , 도시미관과에서 수집하여 (주)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에 성명, 주소 등 자료협조를 받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실적으로는 2009년 10건 1,467천원, 2010년 43건 13,503천원을 부과 하였으며,
- 청소년보호법의 성매매업소 단속실적은 식품 및 공중위생법에 의거 경찰서에서 이첩된 업소에 대하여 2009년 6건, 2010년 3건을 영업정지 하였음.
- 우리시에서는 지난 8월 경찰과 협조체제를 잘 이루고 있는 광주광역시를 벤치마킹한바 있으며, 현재 관련업소와 유해광고물(간판,에어라이트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 앞으로, 경찰서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청소년에게 유해를 끼치는 선정적 광고물 단속에 있어 매월 경찰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유해광고물 제작자 및 업소까지 철저히 단속하여 명랑하고 깨끗한 거리를 만드는데 적극 노력해 나가겠음.

□ 질문의원 : 윤 근 의원

- 전철역 부근 불법 노점상 관련 근절대책은 ?
 - 전철역 부근의 노점상 근절 대책과 노점상 허가제의 운영 방법을 답변하여 주기 바람.

(답 변)

- 시민의 통행이 많은 전철역 부근에는 노점상이 밀집되어 있어 통행에 지장이 초래 될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어, 그동안 지속적인 단속을 하여 왔으나 단속 시에만 정비되었다가 재 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 되고 있고, 또한 자율정비 계도와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하였으나 근절 되지 않는 실정으로, 이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노점자율위원회를 구성하여 노점상 단체 및 노점상인과 소통하고 시의원, 시민단체, 동자생단체와 간담회 및 좌담회로 시민 여론을 형성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광장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노점상 허가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 노점 허가제 도입 목표 시기는 부천역 북부광장은 부천 만화특화거리 조성시점과 송내역 북부광장은 교통환승센터 건립 시점에 맞추어 노점상 허가제가 정착 하도록 하겠음.

□ 질문의원 : 김문호 의원

○ 원미역을 신설할 용의는?

- 대곡~소사 전철은 부천시 교통의 남북횡단을 하는 한 획을 그었다면 원미구의 원미역은 원미동, 심곡동의 미래의 희망의 노선이 될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있어야 할 곳에 역이 없다는 것은 지역 주민으로서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원미구는 뉴타운과 연계하여 원미역이 만들어진다면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부천역과, 소사역, 원미역으로 이어지는 상권 인프라가 구축되어 더욱 살기 좋은 원미구가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간 거리가 1.35km라는 이유로 검토 대상에서 제외 됐다는 것은 지역 주민에게 희망을 조차도 없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원미역은 원미 1,2동과 심곡동 일부 주민 약 6만 여명에게 미래에 희망의 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은 원미역을 신설하는데 적극 나설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 변)

○ 원미역 신설에 대하여 .

- 대곡~소사 복선전철사업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에 따라 국가가 시행하는 간선철도사업으로 2009년 12월 BTL사업으로 지정되어 2011년 착공을 목표로 현재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 중에 있음.
- 원미역 신설과 관련하여, 우리시는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국토해양부 및 관련기관에 정거장 추가 설치를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나 광역철도 지정기준에 미달되어 정거장 추가설치는 어렵다는 입장임.
- 그러나 앞으로도 우리시는 대곡~소사복선전철사업의 일반철도 전환과 함께 시비 부담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정거장 추가설치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 질문의원 : 김문호 의원

- 소풍관련 이행보증금과 지하보행로 관련 향후 시장의 의지는?
 - 감사원 감사시 부천시는 2012년 12월까지 지하보행통로 개설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기간 내에 완공할 것이라고 답변을 했는데 무슨 근거와 어떠한 대책으로 가능하다고 하였는지와 2012년 말 건설된다면 공사 착수 시기는?
 - 부천시는 소송에만 의존하는데 소송에 승소하여 채권이 확보되었다고 해도 실질적인 공사비 확보는 쉽지 않을텐데 공사비 확보에 따른 방안은?
 - 1심 부천시가 승소했지만 항소심 재판이 늦어지는 이유, 승소시 부천시에서 확보 가능한 채권액은?
 - 부천시가 승소하여 이행보증금을 확보하였을 경우 지하보행통로 개설책임을 가지고 있는 부천터미널(주)에서 공사를 하지 않을 경우의 대책은?
 - 부천시와 부천터미널(주)과 지하공공보도 시설에 대한 여러차례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조치사항은 무엇이며, 협의 일자별 참석자와 협의내용과, 지하보행통로의 설치와 관련된 부천터미널(주) 최근 의견, 부천시의 향후 대응방안은?
 - 2012년까지 부천터미널(주)이 지하보행통로를 설치하지 않을시 시정부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만약 부천터미널(주)가 재무악화 등으로 이행을 못하게 된다면 부천시민 혈세로 지하보행통로를 만드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와 지하보행통로를 설치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점은 없는지?

(답 변)

- 소풍관련 이행보증금과 관련한 시정질문에 대하여
 - 2012년 지하철 완공시까지 지하보행통로를 개설할 것이라고 감사원에 답변을 했는데 근거와 어떠한 대책으로 가능하다고 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2004.10. 교통영향평가 심의필증을 교부받을 당시 사업시행자인 부천터미널(주)는 지하보행통로 설치시기를 2006년까지로 하였으나, 사업완료 시기가 도래한 2006년에 지하보행통로설치 사업시기를 지하철7호선 완공시까지로 스스로 변경신청하여 2006.06.15. 시가 수리통보한 사항임.

- 따라서, 시는 부천터미널(주)의 의무 이행사항인 지하보행통로설치는 「(구)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0조(협의내용의 통보)에 의해 통보된 협의내용으로서 동법 제25조(사업자의 의무)에 의거하여 반드시 사업시행자인 부천터미널(주)가 이행해야 할 사항으로 시가 어떤 재량행위로서 통보된 행정처분이 아닌 관련법에 의거한 행정처분임으로 당연히 부천터미널(주)가 이행해야 할 사항이므로 감사원 감사시 지하철7호선 완공시 까지 완공하겠다고 답변한 사항임.
- 다음, 지하보행통로 개설공사의 착수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지하보행통로 개설시기에 대해서는 해당공구(756공구, 삼성물산)에 문의한 결과 사업시행자인 부천터미널(주)가 삼성물산에 여러 차례 문의하였던 사항을 토대로 지하보행통로 설치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을수 있지만, 약20개월 정도 소요될 것이라는 의견을 받은 바 있음.
 - 또한, 시는 부천터미널(주) 의무사항인 지하보행통로 개설의 차질 없는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미납된 이행보증금 납부촉구 총20회, 공사 이행 독려 총8회를 요청하여 지하보행통로 설치 미이행으로 향후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기관 및 부서와 사전협의 및 행정절차를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하였음.
- 다음, 시가 승소하여 채권확보 되었다 해도 실질적인 공사비 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2007.08.22. 부천터미널(주)가 부천시에 승인 요청하여 승인된 이행각서 제6조②항에 부천터미널(주)에서 비용의 증감 발생시 부천시와 협의되어야 하며, 협의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부천시의 결정에 따르도록 제시되어 있어 추가공사비 발생시 부천터미널(주)와 협의하여 부천터미널(주)가 부담토록 하겠음
- 다음, 약정금 등 청구 소에 대한 항소 재판이 늦어지는 이유와 확보가능한 채권액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부천터미널(주)는 2010.2.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현재 까지도 부천터미널(주)에서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우리

시에서는 2010.06.22.에 항소기각을 서울고등법원에 요청하였음. 이에 항소심 1차 변론일이 2010.10.14. 예정되어 있음

- 시는 채권확보를 위해 2010.05.0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놓은 상태이며, 추가적으로 2010.08.20. 실질적인 채권확보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시 고문변호사에게 질의중에 있으며, 일부 회신된 의견과 시 검토결과를 볼 때 현재 부천터미널(주)의 모든 자산은 신탁법에 의거하여 한국자산신탁(주)에 신탁되어 있어 신탁계약 종료후 부천터미널(주)로 귀속될 수익금 규모 및 우선수익자 등에 대한 분배금액 등을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임.
- 다음, 이행보증금을 확보하였다 하더라도 부천터미널(주)가 공사하지 않을 경우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음.
 - 지하보행통로 설치는 「(구)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5조(사업자의 의무)에 의거하여 반드시 사업시행자인 부천터미널(주)가 이행해야 할 사항으로 2007.08.에 부천터미널(주)가 지하보행통로설치 이행을 담보하는 이행각서를 공증받아 시에 승인요청하여 승인된 이행각서 제10조(보칙) 제①항에 부천터미널(주)가 지하보행통로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부천시가 지하보행통로 설치비용을 직접 집행할 수 있다고 제시되어 있으며, 설치비용의 증감에 대해 부천터미널(주)가 부담토록 되어 있으므로 법적 대응을 통해서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 다음, 부천터미널(주)와 지하공공보도시설에 대한 협의한 대책, 조치 사항, 협의일자별 참석자와 협의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음.
 - 2007.09.11. 우리시(도로과)에서는 지하상가 개발계획을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부천터미널(주)에 통보한바 있으며,
 - 2008.10.17. 도로과, 도시계획과, 하수과, 교통정보센터, 부천터미널(주)가 참여한 부천터미널과 756정거장(지하철 7호선)간 지하보행통로(지하상가 포함) 설치관련 회의를 하였으며, 부천시에서는 관련법 및 규정에 따른 처리 절차 및 지하보행통로 추진 절차를 부천터미널(주)에 안내하였고 회의결과를 우리시(도로과)에서 부천터미널(주)에 통보하였음.

- 다음, 최근 부천터미널(주)의 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부천터미널(주)에서 지하보행통로 개설과 관련하여 우리시 입장을 요청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구)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0조(협약내용의 통보등) 및 제25조(사업자의 의무)에 의거하여 지하보행통로설치는 사업시행자인 부천터미널(주)의 의무이행사항으로 지하철7호선 완공시까지 사업을 이행하여야 하며, 만약, 사업시기내에 부천터미널(주)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구)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또는 변경신고) 신청할 경우 행정절차에 따라 처리코자 함.

- 다음, 2012년까지 부천터미널(주)이 지하보행통로 미설치시 시의 조치 방안과 시가 지하보행통로를 설치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로서는, 부천터미널(주)의 지하보행통로 설치 사업계획의 변경이 없는 한 부천터미널(주)가 2012년말까지 설치하지 않을 경우 현재 추진중인 「약정금 등 청구」 및 「지하보행통로개설의무부과처분무효확인」 소송결과를 토대로 시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부천터미널(주)가 지하보행통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소송을 검토하여 조치해 나갈 계획이며,
 - 부천터미널(주)가 지하보행통로를 미설치할 경우라도 지하보행통로 설치에 부천터미널 신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지 「(구)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5조(사업자의 의무)에 의거하여 사업자인 부천터미널(주)의 의무 이행사항이므로 부천시가 이를 설치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음.

□ 질문의원 : 김문호 의원

○ CCTV와 관련하여

- 분기 1회 각 동에서 비상벨이 작동하는지 확인을 할 용이는 없는지
- 향후 시장실과 가까운 곳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보고받고 지시 받을 수 있도록 본청으로 옮기는 방안은?

(답 변)

○ 방법 CCTV 비상벨 점검을 분기별 각동으로부터 확인하는 사항과 상황실을 본청으로 옮기는 방안에 대하여

- 현재, 방법용 CCTV 208대에 대해 2010. 8.16일부터 5일간 전수조사를 실시한바 있으며 비상벨 작동상태에 대해서는 매일 1차적으로 네트워크 관리시스템(NMS : Network Management System)을 통해 확인하고, 2차적으로 현장 확인 통해 장애지점에 대해 복구조치하고 있음.
- 비상벨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분기별 정기검사 계획 수립시 각동의 지원 필요성을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음.
- 방법 CCTV 관제센터를 시청에 옮기는 방안은
 - 현재 부천시 방법시스템의 안정화 및 고도화 방안과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이 발주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본 용역 수행시 상황실을 시청에 옮기는 방안에 대해 기술적, 물리적, 공간적으로 타당한지와 단계별 확대구축방안에 대해 검토하겠음.

□ 질문의원 : 김현중 의원

- 상동호수공원과 부천영상문화단지의 접근성 개선과, 상2·3동 아파트와 호수공원 지하통로 연결 공약 추진상황은?
- 서울외곽순환도로 지·정체 개선 협의사항 및 지하화 방안은?

(답 변)

- 상동호수공원과 부천영상문화단지의 접근성 개선과, 상2·3동 아파트와 호수공원 지하통로 연결 공약 추진상황에 대하여
 - 상동지역 아파트와 호수공원, 부천영상문화단지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지하보행통로 연결시 보행 이동거리 증가에 따라 시설물 오르내림에 따른 보행자의 불편, 계단 통행으로 보행약자의 접근제한, 우범화(슬럼화) 우려 등의 문제가 예상되고, 또한 매년 별도의 유지관리비가 소요되는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호수공원을 연결하는 지하보행통로 사업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 지하(화)통로 외에 호수공원, 부천영상문화단지의 단절구간을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시민의 접근성 확대 및 안전한 보행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서울외곽순환도로 지·정체 개선 협의사항 및 지하화 방안에 대하여는
 - 국토해양부에서는 외곽순환도로 장수~계양간 지정체 완화 실행방안에 대하여 우리시가 지하화를 요청함에 따라 완화방안에 대해서는 무산된 것으로 판단하고 중지된 상태이며, 지하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부천시가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라는 입장이므로, 서울외곽순환도로 지하화는 현실적으로 우리시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수천억대(약 3,600억원)의 막대한 재정사업비를 부담해야 하므로 우리시 자체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서울외곽순환도로(장수~계양간) 지·정체 해소방안은 우리시 문제뿐만 아니라 외곽도로를 이용하는 수도권 시민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외곽도로 지정체 해소방안으로 장수~계양간 지하화가 최선의 방법이라는 당위성을 확보하여, 국토부와 도로공사에 우리시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하여 우리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러한 노력으로 외곽순환도로 지하화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 준다면, 고속도로 하부공간의 활용문제, 호수공원 및 영상문화단지의 접근성 개선, 분진·소음 환경피해 문제 등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질문의원 : 김현중 의원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장수~계양간 지정체 완화 실행방안은?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장수~계양간 지정체 완화에 대해 “도로공사와 협의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을 체육시설물로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와 앞으로의 개선계획은?

(답 변)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장수~계양간 지정체완화 실행방안과 하부공간을 체육시설물로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 및 앞으로 개선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시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장수~계양간 지정체완화 실행방안은
 - 첫째, 영동선 서창 JC부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장수IC구간까지 연장 3.58km의 고속도로를 신설하여 유료화하는 방안
 - 둘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중앙2차로를 이용한 Express 차로설치와 고속도로와 하부를 연결하는 2개소의 Up-Down 램프를 (장수부근:서울외곽순환→무네미길, 서운부근:하부도로→서울외곽순환) 설치하는 방안
 - 셋째, 하부도로 단절구간을 연결하는 방안으로서 중앙병원앞 사거리 (무네미길)~인천 계양구 봉화로구간까지의 총연장 3km 도로를 신설하고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도로와 경인고속도로간 연결램프 설치하는 방안
 - 넷째, 장수, 송내, 중동IC에 대해 램프미터링(RMS)을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또한, 하부공간을 체육시설 공간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현재 국토해양부의 외곽순환고속도로 대체도로에 대한 기본설계용역 지연에 따라 하부공간 사용에 대한 승인이 지연되고 있어 체육시설물 활용을 못하고 있으며, 향후 하부공간 사용승인시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등 13개 종목의 공공체육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맑은물청소사업소

□ 질문의원 : 강병일 의원

- MBT시설 운영에 따라 생산되는 고품연료 RDF는 대한제지(주)와 공급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준공지연으로 협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와 이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는지?
- MBT시설 준공지연과 삼정동소각장 쓰레기 소각장이 2010년5월20일 가동을 중지함에 따라 처리량보다 반입량이 많아 미처 처리하지 못한 쓰레기는 저장고에 저장하고 있어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답 변)

- MBT준공지연에 따른 RDF공급협약 미이행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은?
 - 지난 3월24일 대한제지(주)와 RDF공급협약 체결시 MBT준공일로부터 RDF를 공급하도록 되어 있음.
 - 또한, 대한제지의 RDF 전용보일러시설 준공이 10월말에 예정되어 있고 MBT시설 2차보완공정이 9월15일에 마무리되고 10월중 준공계획으로 있어 RDF공급과 관련하여 문제는 없음.
- MBT시설 준공지연과 삼정동소각장이 가동중지됨에 따라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MBT시설 기능이 일부 미흡하여 성형된 RDF생산이 되지 않고 있을 뿐 현재 쓰레기는 처리되고 있음.
 - 1차보완공사전에는 하루 반입량중 미처리량이 있어 저장조에 쓰레기가 쌓이고 있었으나, 1차 보완공사이후 하루 80톤 이상의 쓰레기를 처리하므로써 점차 저장조 쓰레기가 줄고 있는 실정임.
 - 건조기 추가설치등 2차보완공사가 완료되면 정상처리 될 것으로 판단되어 쓰레기 대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뉴타운개발사업단

□ 질문의원 : 안효식 의원

○ 심곡천 복원과 뉴타운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은?

(답 변)

- 심곡천은 1980년대 초 도시화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생활하수 등의 유입으로 수질오염 및 악취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되어 복개되었으나, 최근 도심하천들은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생태·문화·역사가 어우러진 녹색 생활공간으로 재창조되고 있음.
- 또한, 생활환경의 인식변화로 복개 시설물의 철거 및 과거의 물길 복원을 통하여 하천의 과거·현재·미래, 하천주변의 생활·문화·역사를 고려한 복원목표를 설정하여 하천의 정체성을 찾아주고 인근 주거지역 등을 환경친화적인 주거단지로 조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추세임.
-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심곡천의 복개 시설물(연장 1.2km, 폭 17.5m, 도로폭 40m)을 철거하여 수질개선 및 생태계복원 등으로 녹색 생활공간을 확보하여 시민들에게 되돌려주고자 「심곡천 복원 및 주변지역 개발 기본방향 설정 용역」을 2010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임.
- 따라서, 뉴타운사업 등 주변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복원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도로 폭 내에서 복원하는 방법과 하천단면이 부족할 경우 뉴타운사업과 연계하여 인근지역을 편입하는 방안 등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임.

□ 질문의원 : 김문호 의원

- 뉴타운사업과 관련하여 추진위원회 및 조합설립을 계속 인가하고 있는데 관리처분 때까지 시기를 조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승인할 것인지?
- 시공사 선정전 주민들에게 향응제공 등 과열경쟁으로 갈등이 생기고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은 없는지?

(답 변)

- 추진위원회 및 조합설립승인 등 승인시기에 대한 답변임.
 - 우리시의 촉진사업과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2010년 기준 총92개 구역 중 추진위원회 승인 41개 구역, 조합설립 및 사업승인구역 40개소가 진행되고 있음. 도시정비사업은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입주 시까지 약 7~8년 이상이 소요되는 장기사업으로 어느 구역이 먼저 이주를 시작할지 예측할 수 없어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승인 단계에서 인위적인 제한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임.
 - 다만, 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주시기에 전세주택의 가격 상승률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예상될 경우 관리처분 단계에서 매년 사업물량을 조정하는 쿼터제를 실시하여 주택난 및 전세난이 야기되지 않도록 촉진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또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장기운영에 따른 과도한 운영비 등의 민원발생이 예상되므로 추가비용 발생에 대한 주민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천시 정비사업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추진위원회는 2년, 조합은 3년 이내에 다음 단계로 사업진행이 안되는 경우 지연기간 동안 임원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명예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계획임.

- 현재의 뉴타운계획은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시기에 사업계획이 수립되었으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택경기 등 경제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주민요구에 따른 사업성, 사업시기 조정, 재정착률 향상 등을 검토하고자 지난달 30일부터 주민의견수렴을 시작하였고, 12월 말까지 시민소통위원회 및 각 정당, 국·도·시의회, 관련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추진할 계획임. 따라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도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 시공사 선정에 따른 과열경쟁 등에 대한 향후대책 관련 답변 임.

- 정비사업시행시 시공사 선정은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에서 각 시공사의 입찰조건 등을 비교하여 조합원의 재산을 보호하고 향후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업체를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공업체에서는 사전에 토지등소유자에게 접근하여 과열경쟁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우리시에서는 시공사 선정전에 토지등소유자에게 금품 및 선물·향응 등을 제공한 건설업체에 대하여는 시공사 선정 시 입찰참여를 제한하도록 대안을 마련하여 행정지도 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조합, 시공사 등에게 설명회개최 등의 행정지도를 강화 하겠음.
- 이에 따른 대안으로 도입된 공공관리제를 경기도 관련 조례가 개정될 경우 우리시에서도 주민이 원하는 구역에 2011년 시범실시 하여 그 결과에 따라 확대 실시하겠습니다.